

2·28의 햇볕

2001 / 6

제1권 2호 통권 2호

시 론

분권과 혁신은 시대의 이념이다

기획특집

지방자치법 개정안 분석

우리 대구에는 자치가 있는가?

지방분권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쟁점

문화와 환경은 21세기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다

경제희생에 자원을 집중하자



사단
법인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2·28 학생의거의 대구고 정신을 담은

대고(大高)탑



대고탑은 불의에 항거한 2·28정신과 대고정신을 담아 1991. 10. 에 대구고 교정 달구언덕에 세워졌음



大邱高等學校 同窓會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187번지 (대구고등학교 내)

☎ (053)622-9580 Fax : (053) 622-1497 E-mail : daegugo@hananet.net

2·28의 햇불

2001년 6월 / 제1권 2호 통권 2호 계간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2·28시론

4 분권과 혁신은 시대이념이다 / 윤덕홍 대구대학교 총장

기획특집 / 분권과 자치

7 지방자치법 개정안 분석 / 김광주 경일대학교 교수

11 우리 대구에는 자치가 있는가? / 이종현 대구테크노파크 단장

15 지방분권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 / 이재용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지역쟁점 / 대구시 문화·환경분야 지원정책

20 문화와 환경은 21세기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다 / 이석희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25 경제회생에 자원을 집중하자 / 하영수 대구대학교 교수

시민단체 탐방

30 대구환경운동연합

31 푸른평화

회원광장

32 수필 - 4·19의 불씨 대구 2·28 / 김약수 대구미래대학 교수

34 시 - 생의 노래 / 이기철 시인

자유기고

35 독도를 다시 생각하며 / 류진춘 경북대학교 교수

37 분식회계의 현황 및 근절방안 / 이수광 안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28세대의 학창추억

40 경북대 사대부고 10회 동기 졸업 40돌 문집 만들어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안내

42 2·28대구민주운동 41주년 대통령 축하메세지

43 2001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일지

44 화보

탐방 / 경북고편

47 경북고 교정에 위치한 2·28 기념조각공원 / 신순철 경북중·고 42회 동기회장

일회안내

2·28의 햇불 2001년 6월
제1권 2호 통권 2호 계간
발행인 / 홍중흠 · 편집인 / 박재건
발행일 / 2001년 6월 11일

편집주간 / 오창균

편집위원 / 정시식 여행용 백태호 백진호 윤순갑

이상규 배석기 최연복 장동익 남대진

김상숙 장영향 이완식 김약수 신순철

임원용 권일수 박대팔 이방현 이종호

백수대 박명철 김태일

발행처 / 서단법인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701-013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3동

164-1(대구은행 신암동지점 2층)

TEL : (053)943-0228, 959-2862

FAX : (053)959-2860

E-mail : 228demo@hanmail.net

홈페이지 : <http://www.228.or.kr>

인쇄 / 경북인쇄(주)

분권과 혁신은 시대이념이다



윤덕홍 | 대구대학교 총장

답답한 나라 현실

나라가 매우 어수선하다. 정치고 경제고 교육이고 문화고 마음 놓이는 구석이 별로 없다. 민심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라 일들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좁은 땅은 갖가지 소모적인 정쟁과 갈등으로 편할 날이 없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역사적인 정권교체도 이뤘고, IMF 위기도 극복했고, 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에 의미있는 진전도 일궈 냈지만, 어느 때보다도 국내 정치와 경제, 사회의 위기 징후가 농후하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대표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줄줄이 외국인 손에 넘어가고 있다. 집단 이기주의는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있으며, 이혼과 학원 폭력이 급증하면서 사회의 기본인 가정과 교실이 빠른 속도로 해체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오랫동안 심화되어 온 지방의 위기가 국가 위기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어려운 지방경제나 지방문화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 공화국 지방식민지라는 냉소적인 지적이 새삼스런 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지방이 위기를 넘어 붕괴되고 있다는 진단이 설득력있게 들려오고 있다.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이나 광주나 가릴 것 없이 어렵고 막막하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대구는 다른 지방 대도시들보다도 그 위기의 수준이 깊고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IMF 이후 지역의 대표 기업들이 부도나고 퇴출되었으며, 그 결

과 지역 민심도 여간 흉흉한게 아니다. 정권을 다른 지역에 넘기고 난 뒤, 지역 정치도 구심점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듯하며, 3대 도시 자리마저 인천에 내주면서 자존심도 크게 상처받았다. 선비의 고장, 학문의 고장, 교육도시라고 말은 해도, 지역의 문화나 교육이 빼어난 편도 아니다. 오히려 거칠고 척박하여 외지인이 와 살기 힘든 고장으로 소문나 있으며, 수준 높은 공연이 실패하는 문화 불모의 도시이기도 하다. 21세기는 평생교육의 시대, 문화의 시대라고들 하는데, 여간 걱정되는게 아니다. 지역감정도 우리 지역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남성우월주의, 권위주의, 가부장주의 등의 닫힌 문화도 전국 최고로 이름나 있다. 21세기는 열린 시대, 유연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들 하는데, 대구의 앞날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나라건 지방이건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국가 운영의 기본 패러다임을 바꾸고 나라와 지방이 함께 사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내지 않으면 안된다.

분권은 시대이념이다.

21세기를 많은 사람들은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라고 한다. 정보화와 세계화가 가져올 비인간적 결과들을 막아내면서도 정보화와 세계화의 추세에 적극 대응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소극적으로는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에 도태되지 않고 경쟁력을 유지해 가면서, 적극적으로는 정보화와 세계화가 보다 인간적이

고 복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서둘러 준비해야 할 새 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권이라고 할 수 있다. 분권은 21세기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조직의 원리와 이념인 것이다. 정치도 행정도 문화도, 기업 경영도 국가 경영도, 분권의 새 이념에 맞춰 다시 짜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중앙집중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조직과 경영으로는 정보화시대와 세계화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새 시대에 조직은 빠른 사회변화에 기민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하며, 개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정보가 활발하게 창출되어야 하며, 또한 정보들이 조직원들 사이에 막힘없이 유통되어야 한다. 권위주의적인 조직은 그 자체로서 비인간적이기도 하지만, 경쟁력 또한 확보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나라 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지나친 중앙집중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원형 발전체제를 택했던 지난 군사정권 하에서는 중앙집중의 체제가 효율적이었을 수는 있어도,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시대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앞으로는 각각의 지방과 조직들이 창의적으로 자신의 특징과 강점을 살려 세계경쟁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세계화는 지방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Glocalization)는 주장도 그 때문이다.

지방을 위해서, 지방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이제 중앙집중과 중앙집권의 구조로는 국가마저도 정보화시대의 세계 경쟁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이다. 분권은 정보화시대를 헤쳐가야 할 우리 모두의 국가 이념이어야 하는 것이다.

지방의 분권은 여러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분권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안된다. 총선의 지역구 후보나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의회 출마자들을 중앙당 총재나 지도부가 공천하는 구조, 1인 보스가 지배하는 중앙당과 권위주의 중앙정치에 의해 지방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지금의 구조는 혁신되지 않으면 안된다. 정당민주주의, 실질적인 '정치의 지방화'가 적극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지방정부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상당 부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하며, 국세의 상당 부분은 지방세로 전환되어야 한다. 나아가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루어지려면, 교육자치와 경찰자치가 함께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

분권은 혁신과 함께 가야 한다

그러나 분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냉철한 자기비판과 혁신을 전제하지 않는 분권은 자칫 기형적이고 굴절된 지방자치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그것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기득권층의 지배를 합리화해 주는 결과를 낳고 만 것도, 실은 지방 내부에서의 혁신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분권으로 자율적 권한을 확보한 지방들이 당당히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고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들마다 민주화되고 주민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의 혁신 역시 여러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이 혁신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지방정치가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정확하고도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중앙당의 권력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상의 편의와 복지를 추구하는 생활정치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행정 역시 보다 투명하고 개방된 행정으로 선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밀실 행정, 군림 행정, 권위주의 행정 관행 역시 전면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 산업화시대를 이끌었던 동원형 경제, 정경유착 경제, 재벌식 경영 관행 등도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경영 세습, 탈세, 부동산 투기, 문어발 경영, 차입의존 경영, 가족경영 등의 전근대적인 경영 관행으로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헤쳐갈 수 없다.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는 전문 대기업을 키워가야 하며, 기술혁신과 경영 합리화로 경쟁력을 키워가는 합리적 자본주의체제로 체질을 개선해 가야 한다. 노사간에도 대등하면서도 생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주민의 의식과 문화도 마찬가지다. 학연, 혈연, 지연 등에 매몰된 연고주의 관행을 청산해야 하며, 열린 마인드와 투명한 조직 활동으로 문화적 혁신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를 위해서는 교육의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새 교육은 열린 세계화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새 시대의 새 덕목들을 가르쳐야 한다. 지적 감수성, 창의력, 이해와 공존의 윤리 등이 새 시대의 중요한 덕목이자 교육 목표가 될 것이다.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 분야별로의 혁신 과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리더십을 혁신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시대의 리더십은 돌진형이거나 동원형 혹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인 경우가 많았으나, 정보화시대에서는 조정형, 설득형, 네트워크형의 리더십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이해와 주장을 조정하고 갈등 당사자를 설득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면서, 함께 발전해 가도록 하는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진 시대인 것이다. 그와 함께 총체적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혁신해 내는 과제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맺는말

지방들마다에서 신음소리가 진동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만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지방이 어렵고 피폐해지면, 당연히 나라도 번영할 수 없다. 특히 세계화시대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방들마다 고유의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어야 나라도 함께 부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지방이 피폐해지면 나라도 함께 피폐해지기 마련인 것이다.

지방 살리기는 단순한 지방 살리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나라 살리기 운동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지방 살리기 운동이 지방들마다에서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 살리기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 살리기'를 21세기 중요한 국가 시책으로 설정해 추진해야 하며, 전국의 지방들은 '탈서울 지방연대(분권운동의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하거나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그와 같은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방분권을 위한 연대 운동을 전개하는 외에도 지방들의 분권운동 성공 사례와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는 일에 적극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지방의 혁신을 위한 노력에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야 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지방 지식인들의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때다. 특히 문화와 리더십의 혁신을 위한 뼈를 깎는 자기 성찰과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해 가기 위한 집단적 노력이 절실한 때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 문화를 앞서서 받아들이고 확산시키는 대학이 지역 혁신을 위한 혁신 네트워크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며,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지방과 국가의 밝은 내일을 위해 헌신적인 자세로 지혜를 모으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22**

지방자치법 개정안 분석



김광주 | 경일대학교 교수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

2000년 11월 29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임명제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이 여야 국회의원 42인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어서 12월 2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개정안에 대한 찬성보다는 문제점에 대해 활발한 반대토론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에 위기를 직면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 관련학회,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등에서 반대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방자치제의 기초를 부정하는 내용과 부분적으로 고려할만한 요소들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논의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제의 기본 틀을 부정하는 내용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 부단체장의 국가공무원 임명, 구자치제도 폐지, 구청장 임명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앙징계제도 등인데, 만약 이 개정안에 따라 시

행하게 되면 지방자치는 유명무실해진다. 반면 부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주민소환제와 중·대 지방선거구 도입, 지방의원 수 축소, 지방의원 상근 유급직 전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제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논의가 가능한 분야들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현대정치사적으로 분석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개악적인 부분과 개정논의가 가능한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개정논의의 배경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된 배경에는 뿌리깊은 중앙집권적 정치권력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의 지방자치법은 이승만 대통령이 원내 한민당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외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수년동안 시행되지 못하다가 1952년 4월 25일에 와서야 처음으로 지방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1958년 12월 24일 국회의사당에서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지방자치제의 부활이후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핵심권한은 이양하지 않고, 재정수입이 동반되지 않은 부실한 권한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야당의원을 지하실에 감금시키고 자유당의원만 출석하여 신국가보안법과 시·읍·면장 임명제를 통과시킨 '24정치파동'을 일으켰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이후 제2공화국에서 영국식 내각제와 함께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으나,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되었다가 30년이 지난 1991년에 와서야 비로소 부활하였다.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서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를 독재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양대 장치로 마련되었다. 대통령 직선제는 유신헌법 하에서 대통령 간선제로 제한되었던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지방자치제는 군사독재를 종식시키는 권력분립형 정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통령 직선제로 탄생한 제6공화국도 여전히 군사정권의 연장이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에서 계속 연기되어 왔으며, 1991년에 와서야 마침내 지방의회만을 구성하는 “반쪽” 지방자치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그후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형식상으로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현대정치사의 전체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 집권기간뿐만 아니라 5.16 군사쿠데타이후 30년 동안 중앙집권적인 정치권력은 권력분립을 추구하는 지방

자치의 시행을 계속 유보하여 왔다.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과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제를 반쪽만 시켰을 뿐이다. 중앙집권적인 정치권력은 실제로 지방자치를 시행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였고, 오히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방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이후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핵심권한은 이양하지 않고, 재정수입이 동반되지 않은 부실한 권한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일부 중앙정치권력 엘리트와 관료 엘리트들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도 지방으로 이양된 권력을 되찾으려는 왕정복고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번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은 중앙권력인 국회의원과 지방권력인 자치단체장사이에 존재하는 갈등관계에서 비롯된다. 대개의 경우 하나의 자치구역 내에 단체장은 1인이지만 국회의원은 몇 명이 존재한다.

만약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다른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면 양자간의 갈등관계는 첨예하게 드러날 것이다. 자치단체장은 지방행정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중앙권력과의 협력을 모색하되 지역구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부실한 재정상태, 무차별적인 지역개발과 환경훼손, 구조적인 부정부패와 낭비, 지방의원 전문성 부족, 엄청난 행정 비효율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치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정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다. 국회의원들은 중앙권력 엘리트로서 국회의 입법 활동,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발동, 중앙 관료엘리트와의 협력 등을 활용하여 하향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간섭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중앙집권적 정치권력이 수평적인 갈등을 수직적으로 풀려는 전략적 발상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유신체제하에서 야당 인사들이 문민정부 또는 국민의 정부를 통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독재권력의 견제수단으로 지방자치제의 존재이유가 희석됨에 따라 중앙권력엘리트들은 지난 10년간 지방자치의 병리현상을 수집하여 전략적으로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분권화된 중앙권력을 회수하려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개악적인 내용

개악적인 개정안은 지방자치제의 기초를 부정하는 내용, 즉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 부단체장의 국가공무원화, 구자치제도 폐지, 구청장 임명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앙징계제도 도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이승만 대통령의 '24정치파동'에 버금

가는 것으로 자치시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앙집권적 정치권력에 의한 왕정복고의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개정안들은 지방자치제의 기초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를 시행하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를 그만두느냐 양자택일의 논의이다.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이를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더구나 중앙징계제도까지 둔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개정안으로 볼 수 없다. 과거 독재시절에나 가능한 주장이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제의 개선안이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안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저항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개정안을 현실화하자면 행정전반이 혼란에 휩싸이게 될지도 모른다.

논의가능한 분야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부정 대신 선거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개정안으로는 주민소환제 도입, 지방선거구의 중대선거구화, 지방의원 수 축소, 지방의원 상근 유급직 전환 등이 대두되고 있다.

■ 주민소환제의 도입

재임 중 직무수행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단체장에 대한 견제수단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발안, 주민투표 등 주민의 직접통제제도로서, 이를 위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문제가 있는 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당 단체장에 대한 징계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력집중 시도이자, 시민 능력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지방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개편조정

현행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도로써 지방의회의원의 자질문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후보조작문제, 지방의회가 분파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중선거구 또는 대선거구로 개편하면 소선거구제의 병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지방의원 수 축소와 상근 유급직 전환

지방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지방의회의 운영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의원 수를 줄이고 예산을 확보하여 상근 유급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의정활동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원 수와 의원 보수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가 확립적으로 결정할 성격이 아니며,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정논의의 향후방향

지방자치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도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서 민주시민들이 중

양정부와를 상대로 한 투쟁과정에서 이루어낸 것이다. 문제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온전한 자치에 필요한 기반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중앙정부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었던 시민운동이 자치운동으로 전환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 사이에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부실한 재정상태, 무차별적인 지역개발과 환경훼손, 구조적인 부정부패와 낭비, 지방의원 전문성 부족, 엄청난 행정 비효율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치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정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은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 위기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운동이 더욱 요구된다. 민주시민운동이 주민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주체 세력으로 지방자치의 투입과 산출을 동시에 고려하는 참여적 시민의식을 형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군사독재를 통해 형성된 중앙집권적 정치권력이 전횡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현실 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중앙과 지방 관계의 본질은 권력이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합리적 모델에 따라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권력 엘리트들은 실질적으로 분권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논의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중앙정치권력의 기득권의 복원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지방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앙징계제도로 지방자치에 직접개입하기 보다는 주민소환제를 활성화시켜 시민들로 하여금 지방 권력을 견제하도록 하는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대구에는 자치가 있는가?



이종현 | 대구테크노파크 단장

지금은 시민의 시대이다

나는 두 가지 신문을 받아보고 있다. 조건 전국지와 석간 지방지이다. 바쁜 아침시간에 잠시 전국지를 훑어보면 저녁의 석간을 볼 필요가 없다. 모두가 서울이야기이며 비슷한 소식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연예 등 모든 분야가 서울이야기들 뿐이고, 은연중에 나와 우리는 소외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시장이 누구인지, 구청장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또 알 필요도 없었다. 그저 대통령이나 장관/국회의원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시장이 무엇을 구상하며 고민하고 있고, 시의원은 무엇을 하는 선량들인지, 구청장은 허구한날 왜 그렇게 바쁘는지, 내환동 월드컵 축구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전시컨벤션센터는 무슨 행사를 하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퍼부어야 하는지, 도대체 대구테크노파크는 뭘 하는 공원인지, 산에 가면 그 많은 나무들을 왜 그렇게 길바닥에다 옮겨 심어대는지, 우리 자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믿을 만한지, 대구에서는 정말 '난타'와 같은 세계적 공연을 만들 수 있는 예술인들이 없는지

등 시시콜콜하게 알고 싶은 것은 많지만 알 길이 없다. 전후좌우도 모르는데 갑자기 흥두께 같은 비판논조의 특집 기사를 대하면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알 수 없다.

지금의 우리현실에서 제대로 된 자치를 위해 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자치는 근본적으로 내가 아는 얼굴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내 고장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눈과 머리는 화려한 서울에 가 있고 두 다리만 대구에 있다면 그들이 요구하는 분권은 중앙으로 진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과거 2·28의 핏물을 올렸고 국채보상운동의 선봉이 된 지역이다.

그러나 영남인들이 반세기 대한민국 정치사의 주역을 맡아오며 나라사랑에 비해 지역사랑은 희석되어 왔다. 지금의 지방자치시대에는 중앙을 향한 해바라기에서 이제 씨알이 익어 고개 숙여 자신의 뿌리를 되돌아보는 가을 해바라기가 필요하다. 우스개로 하는 말이지만 우리고장 출신으로 장·차관급 이상의 자리에 계셨던 분들을 다 모으면 초등학교 운동장이 꼭 찰 것이라고 한다. 이제 그분들이 체득한 경험과 경륜을 겸허한 마음으로 지역성장을 위한 거름으로 되돌려 줄

수 있을 때에 우리 지역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지방 자치시대는 시민의 시대이다. 가을 해바라기가 고개 숙이듯 목의 힘을 빼야 한다.

새 천년에는 분권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어느 조직체나 분권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치능력을 갖추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하는 논쟁과 같이「자치능력이 있어야 분권을 해줄 수 있다」, 또는 분권을 해야 자치가 이루어진다」는 공론만 끝없이 이어져 왔고, 기득권을 가진 자와 소외된 자 사이의 이해갈등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그래서 권한의 속성은 양보되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극단의 논리도 등장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 모든 것은 산업화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수도권집중의 결과에서 비롯되며, 개발연대의 생산거점이었던 영남 주민들은「산업의 땀은 낙동강에 씻고 근대화의 기적은 한강에 이루었다」는 자조적 이야기를 낳았다.

우리 나라 근대화의 초기과정에서는 모든 자원을 결집하는 동원경제 혹은 국가통제경제의 모형이 효율적이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시대에는 오히려 그 비효율성이 커지면서 분산통제형 네트워크시스템이 필요한 단계로 가고 있다. 경제학적 용어에는 문외한이라 공학용어로 비유하자면, 컴퓨터를 이용하는 제어공학의 분야에서도 이미 과거의 중앙통제형 시스템은 분산통제형 네트워크시스템으로 바뀌었고, 이는 지방을 생산거점으로 보는 것 보다 스스로 통제기능을 갖는 작은 정부로 만들어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지방자치제도의 뜻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지금은 수년간의 지방자치제를 통해 지역의 자치능

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이 있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본다. 그래야 무늬만 지방자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자치능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 본다. 새 천년의 새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지금, 중앙정부는 제1의 서울에 제2, 제3의 서울을 만드는 지역육성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힘은 역동성이다

어저께 정치권의 수뇌들이 모여서 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되돌아본 토론회 관련 기사를 읽었다. 국민들이 「개혁의 피로」를 느끼고 있으니 이제 안정을 찾아야 할 때라고 했다.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통제식 일방적 개혁에 대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다. 관객으로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국민들은 싫증을 낼만도 하다.

개혁은 변화된 세계환경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하여 국력을 키우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다. 국가적 내부에너지는 다양한 구성체가 서로 결합하는 힘에서 나오며, 서로 다른 개인과 조직의 갈등 속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힘든 노력을 통해서 축적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사회적 인내」이다.

우리의 개혁방향도 국가적 내부에너지를 키우는데 있어야 한다. 물리학의 세계에서 내부에너지는 역동적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시스템용량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중앙제어형의 획일적 시스템은 분산제어형 시스템보다 처리능력이 못하며, 하나의 작은 잘못으로도 전체시스템이 파괴된다.

유럽의 지도를 보면 동유럽, 구 소련의 제국들, 발칸제국을 포함하면 50여 개의 크고 작은 국가들이 모여 있다. 문화와 전통이 서로 다른 나라들이 마치 서로 다른 색깔의 대리석으로 맞추어진 퍼즐그림과 같이 짜여 있다. 국경이 많다는 것은 상호작용이 많다는 것이며, 상호작용이 많다는 것은 네트워크가 이루어 졌다는 것, 곧 내부에너지가 크다는 것이다. 거대한 신생국가인 미국도 50개 주의 자치제도를 통하여 내부에너지를 키울 수 있었다.

지금부터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이며 중앙정부는 이를 위해 과감한 분권을 시행해야 한다. 국민이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면 고통은 감내하더라도 피로를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자치능력을 보여야 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의 선행을 통한 혼돈의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세계 어느 선진국의 예를 봐도 마찬가지다. 혼돈이 무서워 분권하지 않으면 영원히 자치는 없고 종속된 지방으로 남는다. 우리 대구도 세방화(世方化)되어 가는 자치시대에, 「종속적 지방인」이 아닌 「주체적 지역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의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문화와 자치정신을 키우자

우리 대구에는 자치가 있는가? 자치의 의미를 행정자치 관점에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국가가 만들어지며 효율적 통치를 위해 지방을 행정구역으로 분할한 나라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 바탕에는 신라/백제/고구려의 삼국시대에 대한 흔적을 지니고 있고, 정치가들은 열심히 이 지역감정을

이용하려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왕건'이라는 연속극이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왜 그 먼 옛날의 일들이 아직도 우리 나라에 지방색으로 거론되는가? 이는 인종과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자란 고향의 「문화의 문제」이다. 경상도/전라도/충청도 사투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여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려면 그들 공동의 규범이 필요하다. 이 공동규범과 공동이익을 지켜가기 위해 내부통치와 외교능력이 필요하여 하나의 지자체가 형성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물론 분권의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권한의 배분에 관련된 행정의 문제이지만, 자치의 문제는 그 공동체가 함께 향유하고 살아가는 동질의 문화의식이 곧 지자체의 정신이자 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구에는 대구의 문화가 있는가? 대구시민으로서 외지에 나가서 대구만의 것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가? 대구능금은 사라진지 오래고 교육도시로서의 위상도 추락했다. 섬유도시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 중에 있고, 정치도시도 과거의 빛바랜 영광일 뿐이다. 지난 30년의 개발연대를 지나며 우리지역은 생산공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그 대가로 얻어진 모든 문화적인 것은 서울로 집중되었다. 그래서 문화는 사람을 부르고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는 오늘의 문제를 낳게 되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수도권 과다집중에 의한 효율성 약화라는 시각에서 보는 것은 그들의 자기중심적 생각일 뿐이며,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이 황폐화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토양은 가꾸지 않고 수확만 해 가면 머지않아 그 땅이 황무지로 변해 버리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대구에는 영남인재양성의 중심도시였다. 그러나 근대

화 과정을 거치며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인재를 뿔뿔해 갖고 되돌아오는 것은 미약했다. 결과적으로 사람과 문화가 고갈되고 저급화되는 현상은 지금도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인재지역할당제라는 특단의 조치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게 되었고, 지방분권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문화가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인재가 모여야 문화가 피어난다. 또 자치는 문화적/역사적 긍지를 가진 지역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 인재유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고급두뇌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 여건은 「사랑할 수 있는 문화」, 「건강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이다.

대구시민으로서 함께 공감하며 가슴이 통하는 문화적 긍지가 있어야 자치정신의 구심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물적토대 육성이 시급하다

10년 전의 대구와 지금의 대구를 비교해 보면 도시의 면모가 크게 달라져 있다. 대구시청이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살기 좋은 도시」의 3가지 여건 중에서 미관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본다. 도시미관을 위한 도로, 건물, 하천의 정비, 푸른 도시와 공원 가꾸기의 성과로 전국 어느 도시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고, 또 문화적 측면에서도 문화예술회관, 두류공원 공연장, 전시컨벤션센터, 월드컵축구장, 국제공항, 동대구고속철역사 등 많은 시설이 갖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의 행정력에 의해 건립되는 하드웨어에 비

해 시민들이 만들어 가야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대체로 시설의 마련에 100의 재원이 들어가면 또 그 활용에도 100의 재원이 들어가는 법이다. 그래서 하드웨어만 만들고 끝내면 결국 전시행정으로 지탄받게 된다. 대구지하철 건설만 해도 건설비만큼 운영비를 생각했어야 했고, 대구시의 재정능력에 맞추어야 했다. 지금도 문화적 도시환경의 개선에 반대할 시민이아 없겠지만 지하철건설 때와 같은 우려가 되살아 나는 것도 사실이다.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주부가 현명하게 가계를 꾸려간다. 그리고 SOC 사업은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도 그 빚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다. 다만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 그 빚을 다음세대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좀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여건이다. 즉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이란 지역의 생산을 뜻하며 곧 수입이다. 이제는 대구도 이를 위한 행정적 배려와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밀라노프로젝트, 위천국가공단조성, 성서첨단단지조성,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벤처밸리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으로는 미흡하다. 대구와 같은 대도시는 낮은 부가가치의 단순생산공단으로는 자립할 수 없고 첨단기술벤처산업, 금융산업, 문화산업 등과 같은 지식기반형 산업의 영남지역 중심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고부가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매진해야하고, 또한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분권요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개시해야 할 때이다.

지방분권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



이재용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지방분권의 실태와 필요성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7여 년이 지나면서 갖가지 논의와 반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과연 그동안 진정한 의미의 자치가 있었는가」하는 비판이다. 이는 지방정부 권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이룩하고 지역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애초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데 따른 우려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도 행정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 기능의 중앙집중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과 지방간 행·재정적 공평성을 뒷받침할 제도보완 역시 미흡하다. 그 결과 당연히 등장하게 된 것이 중앙행정권한의 확실한 지방이양과 분권화의 완성에 대한 요구이다.

사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은 분권화의 기본이자, 실질적인 자치제 실현의 핵심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도 상호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바가 아니어서 지난 '99년 1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8월에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분권화 촉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오랜 중앙집권의 관행 탓으로 분권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00년 말 지방추진위원회에서 9개 부처 소관 125개 사무이양이 확정됐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그 후 진척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단지 위임사무나 아무런 권한이 없는 단순사무만 넘기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뿐이다.

이처럼 외양과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 분권화가 시급히 완성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주민들은 주로 직접적인 행정참여가 아닌 간접적인 형태의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본권 보호와 자아실현이라는 고유가치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행정이 지역특성에 따라 이루어지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면 중앙집권적인 획일적 행정보다 분권이 유리하다. 셋째, 지방분권은 지역단위에 진정한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종합적·협력적 행정을 가능케 한다.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 참여 측면에서도 지방분권적인 행정은 주민의 끊임없는 자율적 감시아래 수행되므로 정당성 확보가 용이하다.

지방분권의 주체는 오로지 지방일 수밖에 없다. 그

러나 지금처럼 오랜 중앙집권에 길들여진 체제하에서는 순조로운 분권의 촉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지역주민, 시민단체, 경제인, 학자 등이 변화유도에 나서야 한다. 이들이 중앙집권으로부터 지방분권으로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고집이 아니다. 오히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찾기의 실천일 따름이다.

지방분권화의 방향

1. 자치조직권의 강화

자치조직권이란 지방정부가 그 조직을 자주적 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에게 주어진 힘이자, 자치의 주요요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정부 조직형태는 여전히 법령에 의해 지나치게 경직화되어 있어, 그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운영이 지나치게 통제 당하고 있다.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정원을 조정할 때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독립성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각종 지침에 의해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져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 조직의 기본적인 틀은 법률로 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구성, 산업구조, 경제력, 공간구조 및 규모의 크기, 지역문화 등 조직운영에 반영되는 다양한 요소를 갖고 있다. 대도시와 농촌이 다르고, 주거밀집지역과 산업단지지역 등 각양각색의 지역이 있는데도 행정조직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지역의 형편에 맞게 지방정부가 조

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통제를 질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사전통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재정패널티제나 사후권고 등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정부에서도 자체조직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주민을 위하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2. 지방 자주재정의 확충

지방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자주재정의 확보 여부는 대단히 중요하다. 만일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어렵다면, 진정한 자치 역시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란 어떤 측면에서는 소요경비에 대한 자율적인 분담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이만저만 취약한 것이 아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체가 실시된 이후 각 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재원의 빈약성과 재정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재정을 중앙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재정 규모가 국가재정의 30% 내외에 불과할 만큼 영세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재정 가운데 지방세나 세외수입과 같은 자주재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지방세 세목이 획일적이고 재산세율 위주로 편성이 이루어지다 보니 국세보다 낮은 신장률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다 국고보조에 따른 과도한 지방비 부담까지 강요해 지방재정의 자율성 저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 세원이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는 현실적인 사정도 교부세, 조정교부금, 양여금 배분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룰 이루자면 자주재정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세 세입구조를 개편하여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한다든지, 재산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를 통합하는 식으로 지방세목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한 방법이다. 부동산과세 위주의 세제를 소비위주 과세로 전환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소득·소비위주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구조개편도 시급하다.

둘째,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 교부비율을 현재 15%에서 20% 수준까지 상향조정하고 자치구에도 배분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비율은 오랫동안 내국세의 13.27%를 유지해오다가 2000년부터 15%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므로 2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교부세의 주요기능은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완화에 있으나 지역의 잠재적인 개발수요를 제대로 감안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 그나마 자치구에는 직접 배분되지 않아 목표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세원 재배분 및 재정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적 재원 분포가 평준화 되어있는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

세 등은 기초단체로 전환해야 하며,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역교부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국세 중 세원의 지역적 분포가 비교적 고른 세목인 일부 부가가치세(소매업·음식업·숙박업·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부분), 상속세, 일부 소득세(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전화세, 주세 등은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의 안정적인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과세 자주권 확대가 중요한 과제이다.

다섯째, 미군부대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시설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보전이 필요하다. 대구광역시 남구의 경우 미군부대(10만평, 남구면적의 5.8%)가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여 순환도로 개설을 방해하고 공간배치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등 재정기반 마련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하다.

이처럼 국가사무로 인해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별한 재정보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6개 분야 57개항목을 예시적, 포괄적 수권방식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서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국가가 구체적인 지방사무를 개별 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 결과 사무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중앙집권적인 행정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명히 성격상 자치

사무화 해야 할 사항들을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은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나아가 국가사무의 지방위임시에도 일방적인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95년 지방분권법을 제정하고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였으며, 사무이양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조정합리화 등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방정부를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 썸으로 간주해왔는데,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함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실적이 미흡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활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가 많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사무배분기준을 계발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자치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사무는 반드시 이양되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사이에 권한과 책임이 일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 자치입법권 확립

조례는 지방법(local law)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 중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으로 개정하여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사항,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가 행정규칙화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조례가 하위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규정할 수 있고 벌칙을 규정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1. 진정한 주민참여를 위한 분위기 조성

정보디지털 시대, 지방화시대인 21세기에는 주민들이 행정에 더 많은 관심과 목소리를 높이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도 시대적·사회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역문제나 현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누구보다 문제 해결에 열성적이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간접방식을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열린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도 행정서비스의 공급이 지방공무원의 몫이라 생각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 행정서비스의 수요자 입장에서 벗어나 주인의식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2. 지방공무원 행태 변화

민선 지방자치시대 이후 지방공무원들의 행태는 많이 개선되었다. 적극적으로 주민욕구를 찾아내어 해결해주는 봉사행정이나, 주민고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확인행정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치행정에 젖은 공무원 의식은 단시간에 혁신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아 형식적인 전시행정이라느니, 선심용 행정이라느니 하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에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행태와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야한다.

바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자세, 주민을 진정 주인으로 생각하여 성심성의껏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봉사정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질 수 있는 신뢰성이 오랜 관행과 타성을 대신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다.

3. 시민단체와의 협력

21세기는 시민단체의 시대라 일컬어진다. 실제로 우리사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들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활동내용도 지방정부의 예산 및 행정공개,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지출내용 공개를 요구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치밀하며, 개입지향적이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행정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며,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정당하게 평가해야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도 이들 단체들과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고 상호 협조하여 지방자치의 온전한 발전, 완전한 지방분권의 실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맺음말

지방의 시대인 21세기에는 중앙기능이 분산되고, 지역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 한다. 또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로 주민과 행정간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짐으로써 참다운 풀뿌리

중앙정부는 분권화의 촉진이 권력상실과 직결된다는 식의 협소한 사고를 버리고,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깊이 인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기대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우리의 여건은 그렇게 밝거나 긍정적이지 못하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중에도 수도권 인구는 전국인구의 42%에서 46%로 증가되어 오히려 심화된 중앙집중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화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능이나 핵심자원은 수직적 규모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성공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 진정한 분권화를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민생활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밀착해있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국가발전방향을 재설정해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축소·분산시킴으로써 사회저변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도 주민들이 보다 민주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 단체별 인구, 면적, 재정여건, 지역특성을 감안해 특색 있는 행정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를 위한 분권화의 촉진이 권력상실과 직결된다는 식의 협소한 사고를 버리고,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깊이 인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문화와 환경은 21세기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석희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21세기 도시 이미지

오늘날 한 도시의 공간적 이미지는 그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척도이다. 근대화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는 산과 강이 함께 어우러진 자연적 선(線)의 미학을 유난히 강조하며,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조화의 정신 속에서 도시문화를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된 이후에는 전통적인 멋과 여유를 잃은 채 도시 주변 개발에만 전념해왔던 게 사실이다.

이제는 주어진 도시공간을 보다 쾌적하고 향기롭게 가꾸면서 지역 고유의 정체성(identity)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도시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볼 때 대구시가 '문화도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가지 녹지조성, 담장 허물기, 쌈지공원 조성, 가로환경 가꾸기 등은 세계적인 「패션도시」, 「문화도시」 지향에 걸맞는 움직임들이다. 더구나 '문화도시 가꾸기 사업'은 인간과 자연, 인간

과 인간, 인간과 도시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순화시키며 도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계획이다.

물론 대다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성과 역사성 부각을 위해 '문화도시 가꾸기 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긴 사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대구시의 경우는 경실련, 홍사단, YMCA, 환경운동연합, 새마을부녀회,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 등 비정부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뚜렷한 성과를 이끌어낸 모범도시라고 볼 수 있다.

도시개발 패러다임 변화와 도심 가로개발

1.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최근 도시개발은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양적 공급 위주의 압축개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개발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변화된 도시개발 패러다임은 녹지, 생태, 경관, 친수공간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도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된 녹색교통 도시, 걷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길 만큼 아름다운 거리와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문화도시 등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문화도시' 건설은 지역 특유의 문화·역사·전통자원이나 환경·생태·경관과 같은 자연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보존·계승·활용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제 특정 도시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품격 있는 문화 인프라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는 거의 모두 친환경적이며 시민이 아끼는 도심거리, 명소공간, 공원, 테마공간을 두루 갖추고 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 일본 구마모토의 아트 폴리스, 후쿠오카의 넥서스 월드, 고베의 로코 아일랜드 리버물 등이 그 예다. 국내 도시들도 이제는 문화인프라 구축에 힘쓸 때다. 각 도시별로 그 도시가 갖는 역사적·문화적·예술적 특성들을 면밀히 검토해 조건에 어울리는 어메니티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도시하부시설 기능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가로환경, 나무 한 그루, 시설물 하나에도 정성과 문화적 심미안을 가미해 이용객에게 최상의 쾌적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도시의 얼굴이 되는 도심 가로개발

도시에서 가로는 통로 기능뿐만 아니라 경관, 건축, 대지, 공원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컨텍스트의 골격형성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가로는 공유개념으로서 문화적 수준과 행정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도심가로는 한 도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중심가로가 문화적 역할을 하게 되는 「문화의 거리」는 세대간 문화의식과 취향이 서로 교호하는 장이요, 교육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또 문화예술 행위가 주로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공연장이나 전시장, 노변, 건물, 그리고 가로의 분위기와 예술적 취향이 도시 전체에 전달된다. 뉴욕의 소호거리, 맨해튼의 메트로폴리탄 지구, 파리의 몽마르트, 비엔나의 음악거리, 요코하마의 모도마치 패션거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도시의 모든 가로를 이미지 고양 대상으로 삼기는 힘들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 몇 곳을 지정한 후 우선 다듬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역사성이 풍부한 가로, 특별한 행사가 일어나는 가로, 사람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가로, 가로수나 주변 건축물 어울림이 독특한 가로 등 각 도시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부터 중심가로로 적극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

「문화도시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

1. 시가지 녹지조성사업

대구가 「문화도시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푸른 대구가꾸기사업', 특히 도시 전역 대상의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한 결과 4백만 그루의 식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녹지면적은 '95년 100.73km²에서 지난해 138.29km²로 5년간 37.3% 높아졌고, 가로수는 '95년 84,000그루에서 132,000그루로 57.0% 증가했다. 그러나 진정한 '푸른 숲의 도시 대구'를 만들고자 앞으로도 6백만 그루의 나무를 더 심으려는 계획을 세



우고 있다. 특히 대륜고등학교에서 월드컵 경기장에 이르는 약 3.5km 구간에는 가로수 터널을 조성할 예정으로, 490여 그루의 느티나무를 심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큰 나무심기운동'은 초기비용 부담이 다소 많더라도 단 시간에 녹지를 조성하고 녹량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도시로서의 상징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지난 해 다른 도시들의 여름철 평균기온이 0.9℃ 상승한데 비해 대구시는 오히려 1.2℃나 낮아지는 효과를 보았다는 사실이다. 외부의 평가도 긍정적이어서,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세계적으로 이념난 12개의 선진 환경도시와 함께 대구를 솔라시티(Solar City)로 선정함으로써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푸른 숲의 도시 가꾸기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하였다.

2. 담장 허물기 사업

대구시는 '99년 5월부터 '담장허물기사업'을 대구 사랑운동 중점과제로 선정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패션도시 건설과 '숲의 도시 가꾸기' 사업을 선도하고 이웃간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먼저 행정기관부터 앞장서 담장을 허물었으며, 그 뜻을 사회저변으로 확산시켜나갔다.

그 결과 지역 대학, 조경업체, 시민사회단체 등 운동에 공감하는 집단간 협력관계가 구축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또 기존의

담장 허물기와 병행하여 '담장 없는 건축물 만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민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담장 허물기 사업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4월말 현재 121곳의 담장(총길이 7,270km)을 없애고 그 자리에 89,658㎡의 새로운 녹지공간을 조성하였다. 소요예산은 각 행정기관별로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구·군 청사 및 경찰서, 학교 등 도로변에 위치하여 소공원으로서의 효과가 기대되는 곳에 대해서는 도시녹화차원에서 시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고, 종교시설, 학교, 국가투자기관 등에 대해서도 사업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이 운동의 핵심은 행정기관(대구시청·각 구청·동사무소·교육청 등), 전문가, 조경업체,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시민운동으로 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심지역에 문화의 거리,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용지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민·관·학의 연계를 통한 담장 허물기 사업은 국내에서도 매우 교훈적인 사례로 향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3. 쌈지공원 조성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문화도시 가꾸기 사업'의 또 다른 사례인데, 도로개설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땅과 무질서하게 방치된 주택가 유희공간을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쉼터로 활용하고 있다.

우선 '99년 5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수성구 이천동 일원 22개 필지 979㎡ 땅은 총 사업비 11,614천



현재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도시 가꾸기 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책이 아닐수 없다. 각박하고 불합리한 도시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녹색 문화도시의 꿈을 실현하는데 고민과 땀을 아껴서는 안될 것이다.

원(공공근로사업비 5,034천원, 주민참여 6,580천원)을 들여 잔토처리, 자연석 축대쌓기, 조경토 복토 후 조경수, 화초식재, 표지판 설치 등의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원별 담당공무원 및 관리단체(동 유관기관)를 지정하고, 공원주변 환경정비, 잡초제거, 계절별 화초식재, 물주기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시가지 내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경실련, 흥사단, YMCA, 환경운동연합 등 NGO를 중심으로 버스 불법 주·정차, 노상 적치물, 불법광고물, 가로수, 인도정비 상황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순위 발표하고 포상하는 가로환경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마을부녀회 등과 협조하여 화분비치 및 화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품격있는 ‘문화도시 대구’ 건설의 방향

1. 문화자본 축적과 도시 마케팅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화된 소비패턴은 재화만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를 소비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미지 중시형 소비패턴’이 강하게 대두됨으로써 도시문화와 도시정체성의 상징적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 결과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도시 마케팅의 필수적 요소인 문화자본이 도시개발에 투자된 상업자본과 원활하게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다.

「문화도시 대구」의 도시 마케팅과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도시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경관조례 제정, 경관지구의 주민협정 체결, 도시의 C.I 활용사업, 도시가로시설물 디자인사업, 도시 보행환경 개선사업, 간판정비사업, 시가지 녹지조성사업 등을 테마별로 유형화하여 상호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도시 건설 추진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하고 공공성격의 건축물, 도시계획시설물, 다중이용건축물, 도시가로시설물 등의 전체적인 설계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코디네이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2. 도시공간의 심미성 창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만들기 사업’이 도시공간의 심미성을 높이고 역동성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구·동 단위로 마을가꾸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스카이라인, 도시조명, 색상, 상징성, 도시디자인, 공공미술조형물 시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나아가 문화도시 테마계획과 관련된 거리나 공원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시민단체, 학계 등과 연대하여 문화경험과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CI 개념을 기본으로 도시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건물의 형태, 색깔, 디자인, 고도 등에 적극 적용하여 도시 개성을 창출토록 해야 한다.

가로시설물(플랜터, 파고라, 휴지통, 가로등, 전신주, 안내판, 공중전화부스, 바다포장재료, 맨홀, 육교, 지하철역 등)에 디자인 개념을 반영하고, 육교, 다리, 지하철역 등 도시계획시설물을 대상으로 문화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이벤트 시설물을 건립하는 사안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공공건축물, 대규모 건축물,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현상공모방식을 도입하여 차별적 이미지 창출에 기여하고 도시 디자인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문화산업 관련 소프트웨어 집적

‘문화도시 만들기 사업’이 바람직한 결실을 맺자면 문화산업 육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산업이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관련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창의적인 기업인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봉산문화거리와 약전골목을 특색 있는 공간으로 키우고, 문화벤처벨리, 문화상품 제작센터, 문화상품모형 전시거리, 문화상품 판매거리 등으로 특화하여 지원해야 한다.

‘문화도시 건설 추진위원회’ 산하에 문화산업 육성팀을 구성하여 정체성 있는 문화공간과 이벤트를 마

련함으로써 잠재력을 축적해나가야 한다. 산발적으로 형성된 지역 문화자본을 결집하여 계획적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진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려는 시도도 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비로소 역의 자본가의 투자,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소득증대, 생산유발, 주변 지역의 재산가치 확대 등 광범위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문화도시 대구건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가로는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우세 요소이며, 그곳을 통과하는 동안 도시를 관찰하고, 다른 환경요소들의 품격을 높게 인지시킬 수 있는 매체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도시 가꾸기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각박하고 불합리한 도시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 문화도시의 꿈을 실현하는데 고민과 땀을 아껴서는 안될 것이다. 도시는 결코 소수 전문가나 지도층만이 만들어 가는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주인으로서의 관심과 동참을 통해 가꾸어 가야 하는 생활공간이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서 간접적이며 장기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문화도시 가꾸기 사업에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치출을 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적 견해도 다양성과 창의성, 포용성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세계적인 문화도시 대구건설’이라는 큰 흐름에 융합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회생에 자원을 집중하자

하영수 | 대구대학교 교수

성급함이 주는 불안

21 세기를 맞이하여 문화가 주목받고 있는 이때, 우리 대구시도 문화도시로 가꾸어 가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살기 좋은 문화도시란 아마 환경 친화적이고 쾌적한 도시를 의미할 것이다. 푸른 가로수가 우거지고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갖가지 문화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평화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일 것이다. 우리 대구는 몇 년 전만 해도 여름철 일기예보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이름 높았다. 그 이유는 지형적으로 분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숲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도 하며, 대기오염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

그러나 시내를 가로지르는 신천에 정화된 방류수를 역류시켜 다시 물이 흐르게 하고, 도시 녹화사업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한 두 해 전부터는 가장 무더운 곳이라는 달갑지 않은 전국 최고의 명예를 더러 타 지역에 양보하고 있다. 특히 새 단장을 한 신천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갖가지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중

년 시민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시의 환경행정은 도시개발 여파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숨가쁘게 달려온 대구시민들에게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대구시의 녹화사업도 지난 시절과 같이 너무나 일순간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성급함이 앞서 '잃어버리는 것은 없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에 젖게 한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대구시의 문화도시 가꾸기 사업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현황과 문제점

현재 대구시에서는 문화도시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 당국이 의욕을 보이고 있는 범시민 대구사랑운동의 핵심분야이다. 그 결과 도심에 경상감영공원, 국채보상공원 등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을 보유하게 되어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로수 관리인을 둔다거나 시민 1인 1나무심기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1998년에 제정되어 2000년에 개정된 녹화사업관련 대구시 조례의 총칙을 살펴보면, 제11조에 관리청은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가로수 식재 방법, 병충해 방제 등 나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가로수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시민 관리제를 실시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관련 조례를 보면 제13조에 관리청은 가로수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인근 공공기관·학교·단체·기업체·상가·주민 등이 나무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물주기, 병충해 발생 신고, 방제,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사고·재해 등으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모든 시민은 가로수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고, 관리청의 가로수 유지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 모든 것이 지방자치정신에 비추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대구시의 녹화사업 중 가로수 환경정비를 거수목 식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대구시 조례에 의하면 거수목의 기준은 지상 1.2m의 지름이 30cm이상인 나무를 의미하는데,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통상 15년생이나 소나무의 경우에는 30년생 이상의 나무를 의미한다. 이런 나무라면 한 그루의 가격도 만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는 과정의 비용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다.

기존의 어린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거리는 경대병원 앞 거리나 동대구역 주변거리에 비해 초라해 보일 수는 있다. 또 이런 거수목을 심게되면 단번에 푸른 가로가 형성되어 주변을 오가는 행인이나 그 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더욱이 가로수는 환경오염 차원에서조차 정화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대구로의 가로수는 여름을 잊게 할뿐만 아니라 도시녹화에 있어서 유럽전역에서도 앞서가고 있다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시의 가로수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어쩌서 우리는 항상 단번에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즉 경제적으로 국가전체가 위기를 맞이하고, 지역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채보상공원 옆 도로에 한 그루에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대형나무를 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아직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큰 나무를 가로수로 식재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대구시는 가로수를 시민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해 가고 있다. 여기에 직장이나 개인이 어린 가로수를 심는 과정에서부터 애정과 책임을 가지고 키워나가는 즐거움도 고려하여야 한다.

일본의 도쿄나 오사카등 대도시를 여행해 보면 푸른 가로수가 방문객을 맞이하지만 단번에 거수목을 심어 도시녹화를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다. 어린 나무를 심고 그 토양에 적응해 가면서 자라 가는 것과 거수목을 심는 것은 초기의

비용만이 아니라 그 관리차원에서도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거수목이 그 토양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초기 식재 때 시민들이 겪을 불편을 다시 한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예견된다. 이미 지하철건설로 인해 몇해째 고통을 겪고있는 시민들을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문화도시 가꾸기 사업 사례

1. 구마모토현 아트폴리스(K.A.P.) 사업

K.A.P.는 '지방화 시대의 도시개발 사업을 문화행사로 변환해 구마모토라는 지역의 도시와 환경을 아름답게 꾸며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으로 가꾼다'는 의미로 1988년 4월에 시작된 '도시설계 및 환경설계운동'이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과 토목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K.A.P. 활동은 우선 작품의 계획안을 K.A.P.의 작품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결정하게 되며,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본의 유명 건축가 아라타 이소자키가 위촉됐다.

사업주체인 구마모토현이 본 사업을 발주해 개발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커미셔너 방식을 통한 종합적 기획력을 확보하려면 기존의 관행과는 다른 행정체제를 필요로 했으며, 이를 위해 행정담당조직으로서 현 내의 토목부 건축과 및 주택과를 중심으로 K.A.P. 사무국을 구성하고 사업 기획단계부터 최종 건설단계까지 커미셔너를 보좌하며 민간기업 및 자치단체에게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력을 제공했다.

그 결과 획일이나 표준에 의한 경관설계나 환경 가

꾸기에서 탈피, 지역의 이미지와 표현될 수 없었던 문화의식을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도시개발을 문화사업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업의 대상을 박물관이나 공공도서관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건축물에 한정하지 않고 집합주택은 물론, 교량이나 공중화장실, 터널 입구의 환기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해 도시 전반의 물리적 환경 수준을 높이게 되었다.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개발 주체의 이벤트와 연결함으로써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획득함과 동시에 주변지역으로 파급되어 건축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기가 되었다.

2. 후쿠오카 넥서스 월드(NEXUS WORLD) 사업

'다음 세대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물려준다'는 철학으로 미래의 주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세계 속의 도시집합주거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로 추진됐다. 도시생활자에 대한 새로운 생활 제안임과 동시에 후쿠오카 거리를 보다 멋지게 하자는 거리 만들기 제안이기도 하다. 거리 만들기, 즉 도시를 디자인하는 것은 개발일변도로 대도시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도시민들의 인간성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고장에 걸맞는 개성을 창출하는 것이라는 생각 아래 전체 마스터프로그램을 두고 개별 블록별로 국제현상공모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때문에 경쟁력 있는 건축가들의 아이디어가 모여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공연장이 되었고, 건축·도시·조경·디자인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행정·경제·산업 등의 관계자들까지 많은 관심을 보여, 이제는 일반인들의 관광명소로까지 발전했다. 지역민들에게는 정주성이 높은 환경의 제공뿐만 아니라 도시의 자금



심을 심어주었다.

3. 고베 및 요코하마의 문화도시 가꾸기 사업

살고 싶은 거리, 가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고베의 로코 아일랜드라는 섬에 해상문화 도시구축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그 중심에 세계적인 커뮤니티 몰을 구축했다.

중심축에 보행 중심 몰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 커뮤니티 건물 등을 설치해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유치했으며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다. 그리고 요코하마시는 '만남이 있는 살기 좋은 거리', '안심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항구의 미래 21」로 대표되는 다양한 도시개발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요코하마역에서 10분 정도 도보거리에 위치한 포트사이드(Portside) 지구에 예술과 디자인의 거리 조성이라는 주제로 각종 설계지침을 협정형태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개발계획의 개념이자 수단으로 활용했다.

개발지구 전체에 대해 색채지침을 마련하고, 특화시킨 갤러리 로드를 조성했으며, 안전한 보행동선을 유지하는 스카이웨이(Skyway), 요코하마 베이브리지, 포트사이드 수변공원 등을 활용, 어메니티의 도시를 만들었다.

계획적·단계적 추진 필요

어떤 행정이건 행정의 추진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얼마 전 대구시의 모 구청이 대구사랑운동의 선도·실천과제의 하나인 답장 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구청 담을 허물고 주차

장으로 활용하던 안마당을 오가는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였는데, 새롭게 단장한 그곳은 거수목과 분수로 조경이 이루어져 도시미관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담을 허물어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그러나 고액의 예산을 들여 값비싼 거수목을 심은 연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에서 어음부도율 1위를 달리는 대구시로서, 결식아동이 수백이 되는 시에서의 행정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매사에 차근 차근 추진하는 것이 실패의 확률을 줄여주는 기본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무계획적이며 즉흥적인 행정의 부담은 결국 시민의 몫이 된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현대사에 있어 식상하리 만큼 들어본 것이며, 그로 인하여 받은 국민의 상처가 또 얼마인가. 성수대교 사고나 삼풍백화점붕괴사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지하철 공사 중 상인동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대구를 찾는 외국인이 여러 해가 지난 지금에도 상인동을 거론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의 의식은 70년대의 개발방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수를 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 보다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사결정과정의 더욱 투명하여야 하고 가로수 식재의 재정에 있어서도 대구시의 재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끌어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 그루 한 그루를 시민의 이름으로 심거나 단체나 직장과 연계하여 거리 명을 새로이 주어 그 거리와 관계된 민간이 가로수를 심고 관리해 나가는 등

의사결정과정의 투명하여야 하고 가로수 식재의 재정에 있어서도 대구시의 재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끌어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구에서 가장 가로수 조경이 잘 되어 있다는 동대구로나 불로동의 마로니에 거리도 하루 아침에 조성된 것이 아니다. 다음 세대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문화도시를 물려주기 위해 소처럼 우직하게, 평화롭게 걸어가는 시정을 기대해 본다.

의 결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 할 수 있다. 그 거리만이 가지는 독특한 수종의 거리, 예를 들면 마로니에 거리나 은행나무거리가 조성되면 그 또한 명소가 될 것이다.

대구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사업으로 전환하고 어린 나무를 심어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우리 시가 이번에는 시민들에게 이 사업의 추진을 양보하여야 할 것이다. 가로수정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구시의 환경정비를 문화도시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거시적이고 치밀하게 디자인하여야 할 시점이다.

맺 음 말

아름다운 시를 조성하는 것은 시청이나 구청만의 몫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몫이다. 도시를 아름답게 꾸꿨다는 시의 행정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일에 있어서는 그 때와 순서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때에 비싼 비용을 투자하여 큰 나무를 심어 일순간에 모든 것을 이루려

는 행정형태는 21세기에 있어서는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 시는 월드컵개최도시이다. 또 금년에는 대륙 간접축구대회가 열리고 2003년에는 유니버시아드대회도 개최하여야 한다.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는 시로서 내놓을 수 있는 사업계획이라는 점을 이해 못하는 시민은 없겠으나 문제의 핵심을 좀더 근본적으로 탐색해 가기를 희망한다. 대구시를 문화의 도시로 꾸어나가기 위해서 비단 환경정비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이 더욱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구에서 가장 가로수 조경이 잘 되어 있다는 동대구로나 불로동의 마로니에 거리도 하루 아침에 조성된 것이 아니다. 실로 오랜 시간에 걸쳐 다듬고 가꾼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세대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문화도시를 물려주기 위해 소처럼 우직하게, 평화롭게 걸어가는 시정을 기대해 본다.

미래를 향한 꿈,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http://daegu.kfem.or.kr>)은 1991년 폐놀사태 이후 공해추방운동협의회로 활동해 오다가, 각 지역의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1993년 4월 환경운동연합을 결성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힘있는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성장만을 쫓던 수준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단계에 이른 시민 의식 변화와 함께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운동연합 조직들은 지역특성이나 여건에 맞게 독자적인 활동을 펼쳐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과 공해현황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1997년 영천, 경산 등 경북북부지역 불법 폐기물 매립현장을 폭로하고 원상복귀 시켰을 뿐 아니라, 2000년 서대구낙동강습지 골프장건설 반대운동을 통해 대구시의 골프장 건립계획을 백지화시켰다. 또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동강댐 건설계획 반대대열에 앞장서 참여하였고, 올해는 1993년 이후 9년 동안 끌어오던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립반대운동의 2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21세기 지구환경위기를 지역에서부터 극복해야한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는 대구경북시민환경연구소를 통해 행정기관의 에너지, 쓰레기, 낙동강 관련 정책을 철저하게 분석·비판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체계적인 시민환경교육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조직차원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대구시민 1%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투명성과 역동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긍정적인 비전이다.

지구환경의 파괴와 생태계의 위기는 이제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파괴되어 가는 갯벌, 그린벨트, 백두대간... 이러다가는 더 이상 지켜야 할 것들이 남아나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산·강·들·바다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노력은 소중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는 회원들에게 「함께 사는 길」이라는 잡지와 소식지를 보내주고 있다. 환경관련 서적이나 논문, 정부간행물, 비디오, 사진, 슬라이드 등 각종 자료의 이용도 가능하다. 회원이라면 누구나 시민환경감시단, 청년회, 등산반, 청소년환경동아리와 같은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생태기행과 캠프에 나설 수 있어서 좋다.

〈자료제공 : 이은정 대구환경운동연합 간사〉

생명수호의 길, 「푸른평화」

1990년 4월22일 서울 남산에서 열린 「지구의 날」 행사에 천주교 대구대교구 월배교회 젊은이들이 동참한 것을 계기로 대구 「푸른평화운동」은 시작되었다. 오늘날 푸른평화운동의 목적과 이상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존하고, 인간과 자연간 관계를 재정립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임으로써 생태적·전지구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다. 주변의 환경, 온갖 생명들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가정살림, 지역살림, 지구살림을 지켜내려는 생명운동인 것이다.

푸른평화운동은 생태적 삶, 생명경제, 생활자치의 삼생운동(三生運動)을 지향한다. 우선 더불어 함께 사는 생태적 삶을 실현하고자, 우주만물이 모두 한 생명체라는 유기체적 인식 하에 신비주의와 영성·모성회복을 주장한다. 또 근검, 절약, 재활용의 주민참여 생활자치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시 쓰고(Reuse), 줄이고(Reduce), 재활용하며(Recycle), 환경파괴물자를 거절하는(Reject) 4R운동 실천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유기농산물 도·농 직거래는 도시생활자인 소비자와 생명의 일꾼인 농민이 더불어 살아야한다는 한솔밥공동체정신, 그리고 생활협동을 바탕으로 한 녹색경제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푸른평화운동의 구체적인 성과도 많았다. 먼저 지적할 것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죽음을 부르는 악마: 공포의 화학·화학약품 추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합성세제 사용 안 하기, 저공해 비누 만들어 사용하기, 죽염이나 천연소금 사용하기, 소공동체 단위 환경교육하기 등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에 이르렀다.

1991년에는 「더불어 함께 사는 밥상 : 유기농 직거래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스턴트 가공식품을 추방하자, 수입농축수산물을 먹지 말자, 우리 밀을 살리자는 호소는 큰 호응을 얻었다. 생활공동체 만들기 의지가 담긴 생활협동조합도 3곳(상인, 지산, 성서)에서 문을 열었는데, 2001년 3월 31일 현재 1,079가구를 조합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4R 중심의 재생운동은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푸른평화」는 우유갑으로 화장지 재생하기, 쓰레기 분리수거를 널리 홍보하고, 환경강연회, 생명학교, 되살이 장터를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시민단체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1993년에 접어들어서는 풀뿌리 공동체 중심의 생명문화 창출 활동을 펼쳤다. 여기서 푸른평화 환경세계 공장, 청소년 생명교육센터, 녹색음악회, 그리고 생명콘서트 운영을 통해 거둔 성과는 오염된 산과 강을 되살려보겠다는 시민들의 정성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였다.

최근 푸른평화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분야는 생명수호(pro-life)운동이다. 인간생명의 불가침성과 존엄성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생명운동(human life international)의 한국지부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이제 21세기의 푸른평화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간환경의 보전을 위해 임신에서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생주기에 걸쳐 창조질서를 보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따라서 낙태, 흡연, 사형제도, 안락사, 인공피임 문제를 둘러싼 논쟁 한가운데에 푸른평화(<http://ecopeace.or.kr>)가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 석창훈 푸른평화 사무국장〉

4·19의 불씨 대구 2·28

김약수 | 대구미래대학 교수



작년 11월 하순에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가 사단법인으로 결성되어 전보다 더욱 진지하고 책임있는 기념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뚜렷한 명분을 갖고 공개적인 행사와 관련 기념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채보상운동과 더불어 대구의 정신으로 계승시켜나가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는 징표로 국채보상기념공원 서쪽 바로 옆에 폐교된 중앙초등학교 자리에 가칭 「2·28기념공원」 조성 기공식이 지난 2월 28일 41주년 기념일 날에 있었다.

이날 한쪽에서는 민주를 위한 학생데모 거행할 기념하는 공원조성 기공식이 거행되고, 다른 한쪽에선 이 공원조성 사업비와 관련되어 손해를 본다고 판단한 중앙지하상가의 상인들이 생존을 위한 데모를 하고 있었다. 민주화 데모가 생존의 데모를 낳게 하였다. 참묘한 기분이었으며 착잡하였다. 이런 아이러니컬한 느낌을 받은 사람은 비단 필자 한 사람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대구의 정서가 이런 것인지? 모든 시민들이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2·28 기

념공원의 기공식이 거행될 수는 없었을까? 2·28 대구학생의거 정신이 참되게 꽃피고 계승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구시민들로부터 관심과 축하와 격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의 집권의 장기화 정치에 정면 도전하여 대구의 부식들에 문지르고 비비고 세계 쳐서 민주화의 불씨를 피운 것이 아니었던가! 대구 부식들의 불씨에 의해 붙여진 불이 마산 3·15로 번져서 큰불이 되고 4·19의 거대한 민주화(民主火)로 활활 붙어서 온 나라의 기둥을 굽아먹던 독재의 흰개미를 한마리도 남김없이 태워 없애고 민주주(民主柱)를 세웠던 것이다. 대구 부식들의 위력이 이렇게 크게 발휘되었다. 그러나, 그 뒤로 그때 그 부식들에 대한 관심과 고마움을 잊고 서로 내가 먼저 불씨를 지켰다고 떠들었을 뿐, 부식들의 행방에 대해서 알 길을 찾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혼자 생각해 본다. 지금 대구의 정서는 4·19의 불씨가 되었던 2·28의 참된

의미를 바로 되살리기 위해 그때 그 부식들을 찾아서 잘 간직하자는 것이다.

본인은 의거 당일 학생 데모 현장에서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 - 대구 학생데모를 보고 -」란 2·28 유일의 시(詩)를 쓴 선고(先考)의 후광을 입어 영광스러운 본 기념사업회의 이사로 있기에, 2·28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착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가칭 2·28 기념공원 조성에 관해서 생각해 보자. 이 공원조성과 이 정신을 대구의 정신으로 계승시키자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여 거론할 대구시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기념공원 조성에 반기를 들고 데모를 하는 것인지를 한번쯤 생각해 볼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들의 형제나 친지들 중에 2·28 학생의거를 직접 목격하고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 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이들도 대구 2·28이 이땅에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는데 한 톨의 씨앗이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인식해 왔던 2·28로 인해 자신들의 생존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이제부터 이들은 2·28을 어떻게 인식할까 두려우며, 이들의 작은 힘이 대구정신에 무시할 수 없는 찬 기운을 형성하지 않으리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어렵사리 대구정신을 확립하자는 깊고 넓은 깨끗한 취지에 2·28로 인한 단 한 점의 오점을 남겨서는 미래가 불투명하리란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대구의 정서에 있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이 땅의 민주화에 불씨가 되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2·28을 기리는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투입되는 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하기가 어려우면 대구시민들에게 끼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대 부족했다는 처사이다. 대구정신은 대구시민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고 아낄 때 형성된다. 자존심에 대한 명분과 위상에 맞지 않게 대우를 받았을 때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모독을 느끼게 된다. 그 동안 방지되다시피 한 2·28 불씨의 자존심을 추스르고자 하는데 홀대(?)의 주체들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니 대구시민의 심기에 노여움을 더해주고 있다. 41주년이나 될 때까지 기념탑 하나 제자리를 못 지키고 쫓겨 홀로 덩그러니 서 있을 뿐 자료관 하나 없고 찬양의 시비(詩碑)마저 전무하니,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념식 한 번 제대로 거행치 못했으니 참담하고 비통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만든 주역들이 대구에 적잖게 살고 있다. 이들을 2·28관련 조직과 사업에 철저히 배제해야만 대구의 자존심을 살리고 대구정신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으리라고 본다.

2·28정신을 대구의 정신으로 승화시키

기 위해서는 대구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28관련 기념사업의 기획은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시행의 추진은 대구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칭 2·28기념공원의 조성도 대구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시간에 쫓기는 일은 피해야 하며 인내를 통한 공감대의 어우러짐이 중요하다. 이제까지 방지되었고 참아왔는데 일부이긴 하지만 대구시민들에게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지난 과거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사업에 또 다시 상처의 발생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2·28정신을 대구의 정신으로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2·28에 관련된 모든 것을 철저히 수집하고 정리하여 생생하게 보관·전시·보존하고 분석·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당시 의거가담 학생들의 교과서와 공책과 가방 및 교복, 선언문, 의거 상황 사진자료, 증언, 관련문서, 관련 시, 방송 및 신문자료 등을 비롯하여 그 뒤에 만들어진 2·28관련자료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하여 2·28자료관에 영구 보존·전시하고, 기념탑과 기념 시비(詩碑)도 건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2·28의 실체를 통해서 2·28을 상기하고, 나아가서 2·28을 찬양하게 되며 대구의 정신으로 형성되어 이어지리라고 믿는다.

지난해 「2·28 민주의거 기념노래 작사 공모 협조 공문」을 우연히 접한 필자는 내자와 딸애와 함께 사명감을 갖고 몇 날 몇 일 동안에 걸친 작업 끝에 아래와 같이 작사하여 내자의 이름으로 응모하였다. 결

과는 낙선이었지만 응모 자체만으로 보람된 일로 여기고 있다. 대한의 땅에 학생들의 총정이 꽃피었던 거룩한 4·19의 불씨가 되었던 2·28에 등화되어 내 맘속에 작은 불씨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달구벌 옛터에 대한의 민주 꽃피운 대구학생혁명
자유의 종을 울린 젊은 지성의 고함소리
2·28 민주기상 4·19 학생혁명 불붙였네
이 정신 이어받아 대구 위상 더 높이세

팔공산 정기 받아 민주문화 뿌리내린 대구학생혁명
민주의 새벽 밝힌 봉화의 기수 10대의 꽃봉오리
정의의 깃발이여 영원히 민족 위에 펄럭이여라
아! 아! 2·28 송고한 정신 길이길이 간직하세

지난 겨울부터 올해 맹춘에 이르기까지 화재와 산불이 예년에 비해 많이 발생했다. 불은 불씨로부터 비롯되는데, 화재가 나면 재산피해규모와 인명피해에만 뉴스의 스포트 라이트를 받고 불씨에 대해서는 미미하게 취급하기 마련이다. 불씨의 취급이 중요하네 말이다.

이처럼 민주화라는 거대한 불, 독재를 태우기 위해 한 나라를 온통 불바다로 만들었던 4·19라는 엄청난 큰불은 우리 대구의 부식들에서 채화된 2·28불씨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불씨에 대해서는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시민들은 그 불씨의 참된 역사적 의미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2·28불씨의 핵심은 불의를 용서치 않는 선비정신이며, 부식들의 실체는 애국애족정신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식들과 불씨를 잘 보관하고 철저히 정리할 때 비로소 대구의 자존심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詩

생의 노래

이 기 철

움돋는 나무들은 나를 황홀하게 한다.
흙 속에서 초록이 돌아나는 걸 보면 경건해진다.
삭은 처마 아래 내일 시집 갈 처녀가 신부의 꿈을 꾸고
녹슨 대문 안에 햇빛처럼 밝은 아이가 잠에서 깨어난다.

사람의 이름과 함께 생애를 살고
꽃잎의 이름으로 시를 쓴다.
세상의 것 다 녹슬었다고 핼박하는 것 아직 이른다.
어느 산기슭에 샘물이 솟고
들판 가운데 풀꽃이 씨를 익힌다.

절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레 절망을 노래하지만
누구나 마음 속에 꽃잎 하나씩은 지니고 산다.
근심이 비단이 되는 하루, 상처가 보석이 되는 한 해를 노래할 수 있다면
햇살의 은실 풀어 내 아는 사람에게
금박 입혀 보내고 싶다.

내 열 줄 시가 아니면 무슨 말로
손수건 만한 생애가 소중함을 노래하리
초록에서 숨쉬고 순금의 햇빛에서 일하는
생의 향기를 흰 종이 위에 조심히 쓰며

이 기 철 : 시인, 대구시인협회회장 역임, 현재 대구시인회의 대표, 영남대 교수, 시집으로 <청산행>, <지상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
<유리의 나날>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등, 김수영문학상, 시와 시학상 수상



독도를 다시 생각하며

류진춘 | 경북대학교 교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강행이 무엇을 시사하며, 독도침탈기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일본의 중학교 검인정 역사왜곡문제가 터져 나왔을때 역사왜곡문제와 외교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대응 하려는 우리 정부의 초기의 미온적 태도로 분노하는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비등하는 국민여론의 강경한 분위기속에 김대중 대통령은 최상룡 주일대사를 소환 조치하고 정부당국에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는 가운데 교과서의 재수정을 요구하였다.

이 와중에 새로 출범한 고이즈미(小泉)총리 체제로 개편된 日本내각의 총리와 문부대신을 위시한 핵심각료들과 보수우익 언론은 내정간섭말라고 역공세를 취하는 등 양국은 팽팽하게 맞서왔다. 그러나 필자가 처음부터 우려하였던 바와 같이 우리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의 대응은 어느덧 긴장감이 빠지는 분위기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인 냄비기질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물론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와 경제협력의 필요성

이 강하게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일본과 물리적 전쟁을 벌일 입장이 아니라면, 강경론만이 능사는 아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로 국민의 관심권에서 잠시 비켜 서 있는 독도문제가 그 대표적 예의 하나이다.

17세기말 동래어부 안용복의 일본과의 담판으로 독도가 우리땅임이 확인되었고 1877년 일본명치정부가 독도를 조선정부의 영토로 인정하였듯이 독도에 관한 영토주권의 문제는 한국과 일본사이에 역사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명백하게 밝혀졌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의 정치경제적 사정이 어지럽거나 기회있을때 마다 독도를 강제적으로 침탈하거나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망언을 일삼아왔다.

1905년 2월 일본은 제국주의적 힘의 논리와 치밀한 공작을 통하여 러·일 전쟁중중에 전략적 가치가 높은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다케시마로 명명(命名)하면서 어거지로 무주도선정(無主島先占)이라는 방법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와 1953년 민초

홍순철 등 33인의 독도의용수비대의 영토수호활동으로 우리 영토로 다졌으나 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해왔다.

IMF관리체제하의 경제적 위기상황속에 처한 한국적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여 강행시킨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을 계기로 독도를 다께시마化하려는 음모를 거리낌없이 드러냈다.

2000년 이후에 들어와서는 그 수위또한 높아졌다. 일본 외무성의 외교청서 사건,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 그리고 시마네현지사 스미다 노부요시의 망언, 급기야는 현직총리의 극언에까지 이르렀다.

작년 9월 대일(對日) 투자유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정상회담을 위한 대통령의 방일(訪日)직전 모리 당시 일본 총리의 KBS특별회견에서 “다께시마 영유권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발언의 삭제방영사건이 터졌다. 상대국가의 원수를 초청해 놓은 자리에서 초청 당사자이면서 국가 최고책임자가 직접 공개적으로 상대 국가의 영토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외교 관례상으로도 국가간 관계로 본 전쟁중인 상대 국가의 영토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외교 관례상으로도 국가간 관계로 보나 전쟁중인 적군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국가존재를 짓밟는 망발을 쏟아놓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역사왜곡에 대한 반성이 전혀없는 물지각한 일본의 영토팽창 야욕이 빚어낸 결과물이지만 그동안 회피적 태도로 일본의 야욕만 키우게 만들어 준 한국 외교당국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국가의 기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심하게도 모리총리의 발언을 망언이나 극언(極言)으로 규정하지 않고, 뒤늦게 문제가 되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발언”이라는 외교당국의 알개 주무과장의 논평 하나만 덜렁 내놓고 침묵으로 일관한 실정이다. (외교통상장관도 대통령도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다.)

한국정부가 이와같이 독도문제에 대하여 소극적 회피정책으로 손을 놓고 보고만 있는 사이 일본은 전세계

계를 대상으로 독도(다께시마)가 일본 영토임을 알리는 홍보전을 체계적으로 펼쳐어 이제 NASA나 CIA지도처럼 전세계에 통용되는 주요지도는 물론이고 각국지도에 독도가 마치 일본영토인 것처럼 새겨 놓았다. 세계여론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하고 있는데 오직 우리만 이런 사실에 눈감은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서도 그렇듯이 한국정부는 이제까지의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의 독도정책을 과감히 탈피하고 단호한 결의로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천명하고, 독도영유권분쟁이 되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즉각 파기하여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선포하고, 국민의 독도입도를 자유화하여 자유로운 어업활동과 우리국토임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정부가 무능하여 나라를 빼기고 땅을 빼기면 의병이 일어나 나라를 지키고 민초가 땅을 지켜왔음을 우리는 동래어부 안용복과 독도의 용수비대 홍순철 대장을 위시한 33인의 행적을 통하여 알고 있다.

최근 우리정부의 무기력한 독도정책을 규탄하고 독도를 지키려는 크고 작은 민간단체가 결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구경북의 그 활동이 의외로 미약하여 자성이 요구되던 차 지역인사와 시민들이 뜻을 모아 작년 7월 영남독도연구회를 발족, 활동하여 왔으며 2·28기념사업회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독도주권수호 대구경북시민연합회(가칭)창립을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다.

시민 여러분과 시민사회단체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고자 한다.

끝으로 “다께시마(우리의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즐기치게 해 온 일본의 독도 침탈의 최일선 전진기지인 시마네현과 “다께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이며, 시마네현 오기촌에 속해있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는 스미다 노부요치 현지사의 망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있는 경상북도 이의근지사는 대구경북시민에 공개사과하고 자매결연관계의 공식적 파기를 선언할 것을 본 지면을 통해 공개요구하며 글을 맺는다.



분식회계의 현황 및 근절방안

이수광 | 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과거 회계정보라는 것은 특수한 사람들,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나 은행원, 신용평가사, 그리고 기업체의 회계담당자와 같은 전문가들 외의 사람들은 회계정보를 일상적으로 접할 기회나 알아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97년 IMF사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게 여겨지던 많은 일들이 갑자기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회계정보도 그 중의 하나이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모든 부문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하도록 급속히 변화되는 과정에서 회계정보 작성도 국제적 기준적응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경제적 관심 증가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회계정보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회계정보의 일상화에 따라 과거에는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분식이 최근에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과 한국회계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분식회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루어진 분식회계에 대한 청산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적으로 56%의 기업이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회계분식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신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인 존스씨는 “상장사 가운데 회사 정보를 믿을만한 곳이 10개도 안될 것”이라고 경총 최고 경영자 연찬회에서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그렇다면 회계분식은 구체적으로 경제사회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첫째, 선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장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손실 또는 기회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대우그룹의 회계정보를 믿고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한 기관투자자들이 회계분식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예에서도 알 수 있다.

둘째, 채권자 및 공급자 등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채무상환능력, 기업의 영업성과나 성장성과 같은 회계정보에 기초하여 대출하는 금융기관과 물품,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분식된 회계정보를 믿고 의사결정 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셋째, 경영진 및 종업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성과 및 회사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영업계획이나 자금 조달 및 상황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회계분식이 이루어졌다면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없기에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회계정보가 분식이 된다면, 종업원에 대한 수익분배의 문제도 정확히 이루어질 수 없어 사용자와 노동자간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넷째, 기업과 국가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이나 국가는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회계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회계정보를 믿을 수 없다면 의사결정을 하거나 해당 기관의 신용도를 평가함에 있어 할인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럼 과연 회계분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4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먼저 가공의 재고자산을 계상하거나,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는 존재하지 않거나 생산되지도 않은 재고자산을 있는 것처럼 계상하고, 재고자산의 단가를 부풀리거나 못쓰게 된 재고자산을 정상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의 외상채권을 계상하는 방법도 있다.

회수한 금액을 유용한 후 외상채권을 그대로 두거나, 매출을 미리 계상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공사진행율을 미리 계상하여 매출을 조기 인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장기 건설공사는 매년 원가율이 상승하는 웃지 못할 희극이 연출되기도 한다.

세번째로는 부채를 숨기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즉 차입한 돈의 일부를 유용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거나, 지급보증한 상대방이 부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손실로 반영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네번째로는 당기에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을 미래의 기간으로 이연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연장하거나 이를 숨기는 것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기업들은 회계분식을 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은 관행이라며 어느

정도 용인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관행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소액주주들의 권리익식 향상도 회계의 투명성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1999 회계연도에는 '부적정' 의견이 1개, '의견거절'이 12개에 불과했던 것이, 2000 회계연도에는 12월 상장결산법인 571개 중 회계원칙에 어긋나 평가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의견을 받은 기업이 6개,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의견을 낼 수 없다는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 19개, 회계감사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는 영향이 없다는 '한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22개로 급증하였다. 일례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던 S양회도 계열사 대여금 처리에 대한 입장차이로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판정을 받아 회생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증권업협회는 회계부실법인의 등록취소 요건을 증권거래소 수준으로 정한 협회중개시장(코스닥)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회계분식하는 기업을 부실기업과 똑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의도적으로 부정확하게 한 기업은 사업결과와 자본잠식이 된 것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 즉 '부정적' 의견이나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자본이 전액 잠식된 후 다음 연도에 '부정적'이나 '의견거절'을 받으면 시장등록이 취소되어 퇴출된다.

이에 더해 지난 3월 21일에는 참여연대에서 분식회계를 한 것이 적발되기도 미온적인 행정제재만을 받은 부실 금융기관, 워크아웃 기업 및 당시 대표이사, 회계법인 등 모두 15곳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류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처럼 소액주주의 권리익식이 향상됨에 따라 앞으로는 회계분식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까지 과거 관행화 되었던 회계분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과거 잘못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부실을 털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투명한 회계가 불가능하기에, 과거의 부실장부 내역을 솔직히 공개하면 금년에 한해서 처벌을 면제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쪽은 기업 회계장부 조작은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부를 조작한 기업과 회계감사인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투명한 회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분식을 털어내는 것이 필요한 데, 이는 스스로 자백하기 전에는 밝혀내기 어렵다는 현실인식에 바탕을 둔 의견이다. 과거 부실을 제거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관행처럼 해왔던 회계분식은 영원히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초법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과거 이미 분식회계로 처벌을 받은 기업주나 회계감사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국민적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대하는 의견은 분식회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방안이 초법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본다.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고 해도 기업 스스로가 분식회계를 자인하고, 이를 재무재표에 반영할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다. 만일 분식결산 사실이 알려지면 형사적인 책임과는 별개의 주가 하락을 불러올 것이며, 주주들의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실질적으로 분식사실을 자인할 기업이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인 것이다.

오히려 분식회계의 원인은 효익이 비용보다 높은 구조에 기인하기에 비용을 더욱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분식회계가 적발될 확률을 높이고,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있는 기업의 내부자가 감독기관이나 언론기관 등에 이를 제보하는 경우 그 제보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내부 고발자 보호규정과 같은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회계분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분식회계는 죄악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즉 다른 기업들도 한다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인식을 모두가 버려야 한다. 회계분식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자신도 망치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해진 회계표준과 제도를 따른다면 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회계표준과 공시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기존의 기준과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절실하다. 신용평가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회계표준 실행여부를 감시하여 최소한 상장기업의 회계분식은 적발이 되어야 한다.

셋째, 감사인들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감사수입 제도하에서는 기업들이 자신이 원하는 감사의견을 받는 ‘오피니언 쇼핑’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최소한 문제가 되는 기업들에 한해서라도 감사인 지정을 늘려 제도적으로 회계분식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이룬 후에는 회계분식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최근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당시 감사를 하였던 한 회계법인이 문을 닫았으며, 부실감사와 관련하여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0 회계연도에는 더욱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동안 다음의 감사수입을 위해 대부분 적정의견을 주던 관행이 조금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역설적으로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오히려 분식회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분식회계는 먼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근절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감사인 및 기업주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북대 사대부고 10회동기 졸업 40돌 문집 만들어



민주를 향한 절규 2·28 함성이 아직도 귀에 환청으로 남아 맴도는데, 세월은 벌써 40여년이 흘러 그때 홍안의 청소년들은 어느덧 서리를 이고 있는 이순(耳順)에 이르면서, 일손을 놓고 산을 오르내리는 노년의 대열에 들었다.

이처럼 생성과 사멸의 자연이치를 한 몸에 지닌 채 가을의 문턱에 선 인생 갑년(甲年)에 경북대 사대부고 제10회 동기회원들이 졸업 40주년을 기념하는 문집 「추억의 넝쿨」을 냈다.

2·28세대. 그날 밤 남대구서를 힐끗 지나치며 중앙통으로, 도지사 관사로 어둠을 뚫고 달리며 민주를 갈구하던 그들이, 40여 성상을 세파에 휘둘리며 얻어온 삶의 참모습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시대와 더불어 지내오면서 어렵고 고단한 일들이 많았지만, 되돌아보는 눈길들은 한없이 따뜻하고 여유가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40여년. 그 동안 세파에 시달리며 더러는 청운을 이루어 입신양명의 영광을 누리기도 하고, 또 더러는 성급히 원래의 위치론가, 어딘가로 가버려, 시공을 달리하기도 하는 40여년을 그때 그 마음으로, 동창의 이름으로 만나고 있음은 우연이 아니라며 행여나 시공을 달리할 친구들이 더 많아질까 하는 조바심 때문에 한번 강한 엑센트를 찍고 싶은 염원 있어 문집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졸업 40주년에 다시 쓰는 군성(群星)」이란 부제가 붙은 문집에서 편집진은 축서(祝書)를 당시(唐詩) 산행(山行)중 마지막 구절인 ‘霜葉紅於二月花’(상엽홍어 이월화)로 택했다.

‘서리맞은 잎이 이월꽃보다 더 붉은’ 가을 풍경이 바로 자신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마 가을이 지닌 풍요와 조락의 야누스적 암시를 이생 육십에 아름답게 펼쳐보이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을 것이다.

‘기억의 저편’, ‘추억의 갈피’, ‘단상초록’, ‘육담의 문학성’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된 문집에서 각계각층의 명망가들은 40년전 그 시절의 모교와 친구들 그리고 은사에 대한 기억을 더듬고 추억을 되살리며 지난 삶을 관조하는 글들을 남기고 있다.

특히 이 문집에는 최용호 경북대학교 경상학부 교수의 고등학교 시절의 일기를 실고 있어, 그 당시의 시대상황을 훤히 보는 듯한 감회를 불러오기도 하고, 100여명 각계 각층 인사들의 삶의 단면을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인교 동기회장(계명대 교수)은 “아직도 허물없는 그때 그 마음으로 40년동안을 만나고 있으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면서, “졸업50주년 기념식에서 영원히 이별한 이들이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나누고 싶었다”고 문집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오영목 직전 동기회장(전 매일신문 편집국장·상무)은 동기회원들의 면면과 삶의 궤적을 꼼꼼하게 소개했다.

백태호 동기회 총무(대구산업정보대학 교수)는 스승과 친구들의 별명과 거기에 담긴 사연들을 구성지게 풀어놓았고, Y담을 실은 육담코너를 뒤적이다 보면 너털웃음이 절로 난다. 연륜이 그만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 시각에는 다소 구버전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이월화’가 ‘상엽’의 농염한 풍자와 해학을 어찌 따를까.

「2·28 대구민주운동」 41주년 축하 메시지

오늘 뜻깊은 제41주년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이 기회를 빌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추모와 존경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2·28 대구의거는 우리 현대사에 선구적인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대구의 학생과 시민들의 반독재를 위한 쟁기는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의 민주인권국가는 바로 그 분들의 열정과 희생 위에 서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을 21세기의 으뜸가는 민주인권국가로 만들고 세계 일류의 지식 경제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기본철학으로 삼고, 국민 여러분과 같이 전진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41년전 달구벌을 달구었던 그 열정과 애국심을 다시 발휘하여 위대한 내일을 창조해 나갑시다.

오늘 기공되는 2·28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원하며, 기념사업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대한 대구시민 여러분의 건승을 바랍니다.

2001년 2월 28일

대통령 김대중

2001

사단법인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일지

- 2001. 2. 19 「2·28민주포럼」 개최 준비회의(사무처)
- 2. 19 매일신문 정재완 사장, 김정길 부사장 취임
- 2. 21 TBC 대구방송 이길영 대표이사 사장, 김재백 상무이사 취임
- 2. 21 2·28 41주년 기념식 준비 총무위원회 개최(사무처)
- 2. 28 2·28 대구민주운동 제41주년 기념식(2·28기념탑)
- 2. 28 2·28 대구민주운동 제41주년 기념 2·28사진전 개최 2·28(기념탑)
- 2. 28 2·28공원(가칭)기공식(중앙초교 옛자리)
- 2. 28 「2·28의 햇불」 창간호 발간(2000부)
- 2. 28 「2·28의 햇불」 2호 편집위원회 개최(사무처)
- 3. 23 「2·28의 햇불」 2호 편집위원회 개최(사무처)
- 3. 26 제1회 2·28 대구민주운동 글짓기공모전 계획 수립
- 3. 27 제1회 2·28 대구민주운동 글짓기공모전 보조금 신청
- 3. 29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대구광역시 제119호)
- 3. 30 제1회 2·28 대구민주운동 글짓기공모전 후원기관 협조요청(언론기관)
- 4. 4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협조요청(동구청)
- 4. 9 「사단법인 4월회」 10주년 기념식
- 4. 17 제2회 4·19 문화상 시상식(서울)
- 4. 19 제41주년 4·19혁명 기념식(경북도청강당)
- 4. 19 이수규 경북대학교수(분회 학술위원) 기초학문 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 4. 19 이수광 공인회계사(분회 감사) 한나리당 이회창 총재 후원회 상근 부회장 취임
- 4. 24 흥중흥 공동의장 대구문화예술회관 관장 취임
- 5. 17 2001년도 회원가입 협조요청(대구시내 각 고등학교)
- 5. 17 공익기부금 등록 허가 : 재정경제부 공고 2001-54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 규정)
- 5. 19 이수광 감사(공인회계사)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으로 선출
- 5. 31 2001년도 사업추진계획 점검 및 2·28민주운동연구소 운영 실무회의
- 6. 9 문희갑 공동의장(대구광역시장)은 계명대학교로부터 도시발전공적으로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음

❖ 참가 조의를 포함합니다

- 2001. 2. 21 대성그룹 김영대 회장 부친상
- 3. 21 대구해병연합회 임효근 회장 모친상
- 3. 28 오남수 이사(대구광역시의회 의원)별세
- 6. 7 이진근 이사(대구광역시 행정관리국장) 부친상

❖ 축하드립니다

- 2001. 3. 21 이해두 이사(대구대 교수) 장남 결혼
- 3. 21 손진홍 이사(필진통상 대표이사) 장남 결혼
- 3. 31 이방현 이사(방일(주) 대표이사) 장녀 결혼
- 5. 20 최호근 이사(오피시스템 대표) 장남 결혼



2·28 대구민주운동 41주년 기념식

21세기 새로운 사회발전의 선도적 역할다짐

2·28 대구민주운동 41주년 기념식이 지난 2월 28일 오전 10시 대구시 두류공원 2·28 기념탑에서 홍종흠 공동의장과 문희갑 대구광역시장, 이수가 대구시의회의장, 각급 기관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홍종흠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2·28 대구민주운동 공원 조성에 정부지원을 약속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41주년 축하메세지를 보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그동안 「사단법인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현실적 과제연구와 참여를 위한 「2·28 민주운동 연구소」를 창립하였으며, 250만 시민의 뜻을 모아 2·28공원을 조성하는 기공식을 갖게된 감회를 피력하였다.

홍종흠 공동의장은 41년전 대구에서 지핀 민주화의 불씨가 온 나라에 민주화의 불길로 타올랐듯이, 국가와 민족이 대변혁기에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을 수 있도록 그 실천운동을 제안하면서, 2·28민주운동 정신에 공감하는 대구

경북인들이 선도적 역할을 다할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본회 공동의장인 문희갑 대구광역시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2·28 대구민주운동을 위해 노력해 온 2·28 임직원 및 회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앞으로 2·28대구민주운동사업 지원은 물론 다양한 기념사업창출과 함께 2·28대구민주운동정신을 대구정신으로 영원히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수가 대구광역시 의장은 의로운 2·28대구민주운동 4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시민과 함께 21C민주개혁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41주년 기념식장에는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준비한 당시 민주화 시위현장 사진 70점을 전시하여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어서 거행된 (가칭)2·28 민주공원 기공식이 각급 기관단체장과 시민, 학생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평동 중앙초등학교 옛자리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시행청
대구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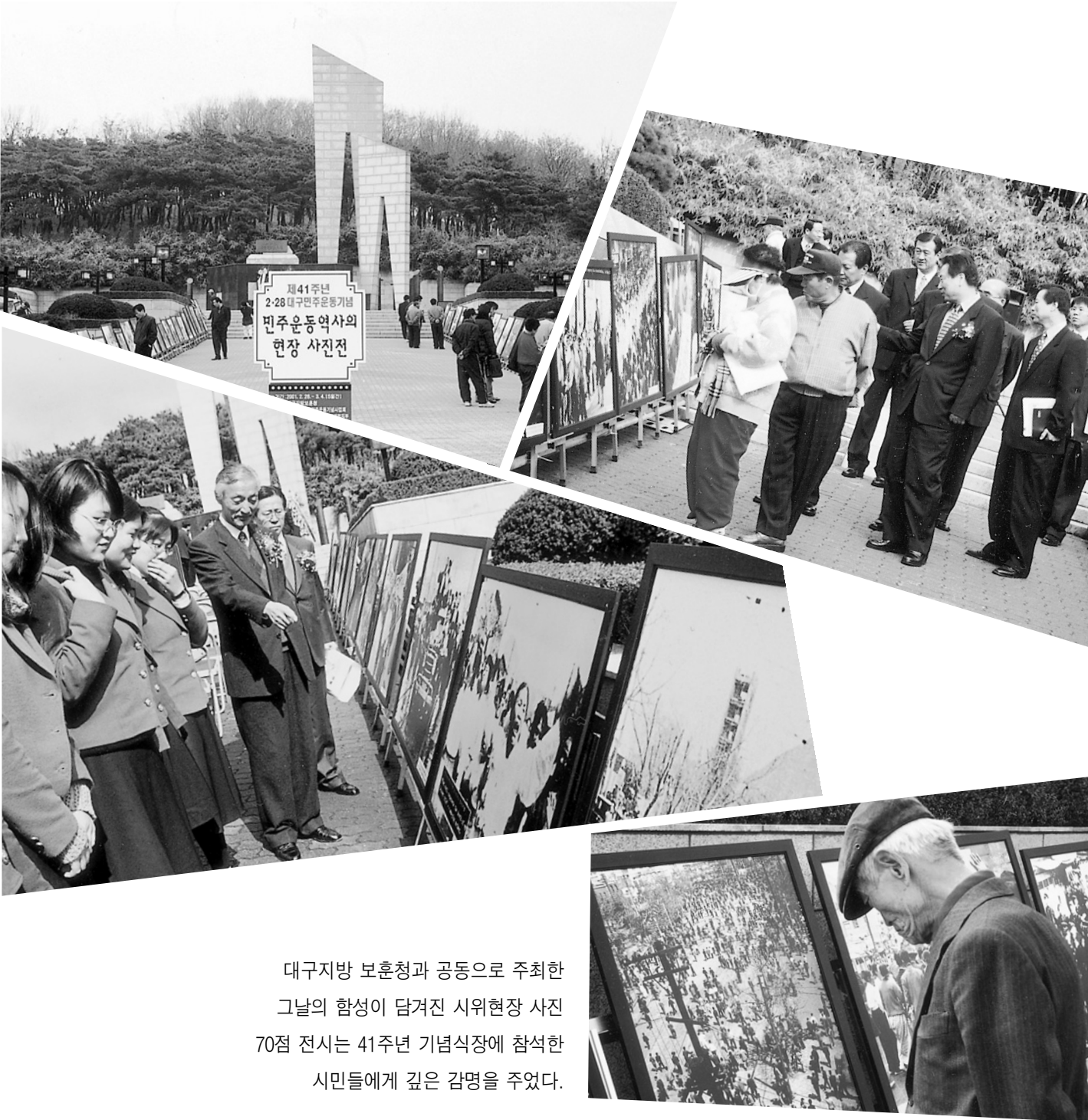
투자시행사
대한신업주식회사



2001년 2월 28일 오전 (가칭)2·28 공원 기공식이 각급기관단체장, 2·28회원, 시민, 학생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초등학교 옛자리에서 거행되었다.



홍종흠 공동의장은 제2대 2·28민주의거기념사업회 회장과 40주년 특별기념사업회 공동의장을 역임한 최용호 경북대학교 교수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대구지방 보훈청과 공동으로 주최한
그날의 함성이 담겨진 시위현장 사진
70점 전시는 41주년 기념식장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탐방
경북고등학교 편

경북고 교정에 위치한 2·28 기념조각공원



경북중·고 42회 동기회장
신순철 서라벌대학 교수

청탁원고에 쫓겨 일간지 사진기자를 지냈던 김양보(42회) 동문과 함께 19일(토) 다시 모교를 찾았다.

황금동 너른 운동장에 검찰직원들의 친선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었고, 그 위 야구장에는 싱그런 오월 태양아래 우리 졸업기수의 꼭 두배가 되는 후배야구선수들의 고함소리가 공중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두 운동장 사이로 차를 몰고 들어가니 정남쪽 중앙에 넓게 단을 만들고, 단 위에 2·28기념조각이 우람하게 우리를 맞이한다.

가로 세로 20x10m가 확실히 넘는 장방형 대가 정면과 좌·우측에 만든 3단 층계 위에 다듬어져 있다. 2m가 넘는 두툼한 2·28이라는 자체가 오석으로 조각되어, 좌우에 대리석 탁자와 의자 두 조를 배치하여 키작은 소나무 다섯 그루로 인공적인 쉼터를 마련해 두었다.

단 둘레에는 대나무, 키큰 소나무, 느티나무가 기념동산을 에워싸 산만한 운동장 분위기를 누이고 있다.

5월 둘째주말 이틀 동안 경매제 준비판계로 모교 교정을 드나들면서도 「떠난자리의 서막함」을 느낄수 없었던 것은 분명 2·28 기념조각동산 때문일게다.

40여년전 대봉동 시절의 사건을 이제 황금동시대에 재현한 이 유형물은 우리의 자랑이요 긍지였다. 까까머리 고교시절 우리가 해낸 2·28학생 민주외거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역사적 평가도, 또 그 중심에 42회 우리가 우뚝 서 있었다는 사실보다도 우리 피붙이요, 나의 분신이라는 감각적 느낌이 이 기념조각 동산을 우리가 꾸민 당위성이라면 틀림없으리라.

스텐드로 구분한 두 운동장 위 남쪽.

대리석과 잔디로 바닥을 깔아 기념조각과 동산명을 돌

에 새긴 이 기념조각동산은 단순히 과거를 기리고 기념하는 장소가 아닌 오늘의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는 거울이요, 내일의 주역인 후배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산교육장이 되리라는 희망에서다.

시간이 흘러 달빛에 바랜 야사가 다닌 청천백일하 오늘 새롭게 재조명되어 정사로 굳어진 이 2·28 민주위거는 40년이 지난 오늘에서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되었고, 대통령도 40주년 기념식에 몸소 축하하러 오신 것이 너무 늦은 것만은 아니다.

과거 역사적 사건들이 새로 평가받는 데에 걸린 시간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두류공원에 우뚝 선 기념탑. 올해 시내 중앙초교 부지에 착공한 기념공원 조성, 이 모두가 그동안의 앙금을 삭일 수 있는 훌륭한 업적들이다.

현 기념사업회 문화갑, 홍종흠 두 공동의장, 그리고 열악한 시절에 일을 맡아 애쓴 장주호 최용호 의장의 노력이 결국 찬란히 꽃을 피워낸 것이리라.

10년전 1991년, 우리가 42회 졸업 30주년 기념으로 동기회 회장단들과 동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운 이 기념동산을 보며, 지난 2·28기념식(2001. 2. 28)이 두류공원에서 열리기 앞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지도교사, 42회 동기회원, 재학생 대표들이 먼저 이 기념조각동산에 헌화를 하고 축사와 설명으로 그날의 주역들이 후배들에게 가르침을 준 사실은, 이 기념동산이 가지는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다.

조병준(42회), 최경호(42회)가 직접 조경을 맡아 꾸민 이 기념조각 동산이, 내리비추는 석양에도 의젓한 자태는 그대로였다. 그리고 2·28이라는 검은 오석의 글자가, 그리고 그 조각의 두툼한 볼륨이 주는 엄청난 무게는 넓은 운동장을 채우고도 넉넉했다.

끝으로 동산명을 옮겨 글을 맺는다.



2·28 기념조각 동산명

햇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형형한 눈빛과 불끈 쥔 두 주먹을 부정과 불의를 박차고 민족과 국가의 밝은 앞날을 희구했던 서기 1960년 2월 28일 그날의 노도와 같은 함성을 이 동산에 새기는 뜻은 경맥정신의 영원한 의로움을 기리고자 함이다.

일제침략 35년의 암울했던 식민기가 끝나고 민족분단의 슬픔이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지면서 가난과 독재의 질곡으로 민족과 국가의 명운이 쇠진할 무렵 제42회, 제43회 동문들이 정의와 진리의 마그마가 끓고 있는 경맥정신을 활화산처럼 분출시켰던 것이다.

그때까지 회칠한 민주주의로 왜곡돼 왔던 역사는 2·28민주의거로 점화되어 3·15마산의거 4·19혁명으로 변진 불길이 그 거짓의 껍질을 불태움으로써 마침내 참다운 민주주의 역사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뒤 2·28은 세계의 많은 다른 독재국가들이 민주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들의 청순한 가슴을 가위눌리게 했던 당시의 절망적 상황은 정권욕에 눈이 먼 사악한 집권자유당의 무리들이 신성한 학원마저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기에 이르러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유세를 듣지 못하게 전대미문의 일요등교를 강요했던 것이다.

독재와 불의로 상징되는 일요등교에 항거한 그날의 일은 건국 이후 진실된 민의의 첫 표출이었으며 사이비 민주세력의 발호에 죽음을 넘는 용기로 쏘아붙인 구국의 첫 화살이었다. 그리고 식민과 분단으로 찌들려 왔던 이 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로 융성하기를 염원하는 햇불을 올려 어둠의 사회에 한줄기 희망의 빛을 던진 것이었다. 또 그것은 경맥인의 양심이었다.

그때의 의거를 이끌었던 42회 동기들이 졸업 30주년 되는 해에 당시의 뜻을 담아 이 기념조각동산을 만든 것은 아직도 그 경맥정신이 모교의 선후배와 이 나라 양심속에 강물처럼 흘러내리기 때문이다.

서기 일천구백구십일년 오월 십이일

이강소(42회)가 설계하고, 홍종흠(42회)이 글을 짓고, 류영희가 쓰고
경복중·고 제42회 동창회가 만들다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원가입 안내말씀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60년 2월 28일 일어났던 대구학생 민주주의거는 광복이후 최초로 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었으며, 4·19혁명의 진원이었습니다.

그 동안 2·28 기념사업회에서는 당시의 숭고한 민주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해 40주년에는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을 모시고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였고, 「2·28 민주운동사」 출판,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특별 기념사업들을 펼친 바 있습니다. 또 올해는 41주년을 맞아 (가칭)2·28 공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본 사업회에서는 2·28 민주운동정신을 대구정신의 한 주류로 영원히 이어가고, 21세기 국민정신개혁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1차로 22,800명의 회원모집과 함께 「2·28 공원조성」, 「2·28의 햇불」 책자발행, 「2·28 민주운동 글짓기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대구시민과 출향인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으셔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2·28 기금조성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 6월 일

사단법인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문 희 갑 · 홍 종 흠

본 법인에 납부하시는 회비 및 협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거 귀사의 기부금으로 손금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재정경제부공고 제2001-54호).

우리고장 우리은행

21세기 최우량 지역전문은행- 대구은행
강하고 튼튼한 지역의 대표은행입니다.

대구·경북에는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대구은행

www.daegubank.co.kr

제 1 회

2·28대구민주운동 글짓기 공모전

대구지역 초등 사회탐구 4-1 「대구생활」 교과서에 대구학생민주운동 관련 내용이 수록되었습니다. 2·28대구학생 민주운동이 우리나라 정부수립후 최초의 민주운동이었다는 자긍심을 갖게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대구2·28정신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1. 주 최 : 사단법인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2. 후 원 : 매일신문, 영남일보, KBS대구총국, 대구MBC, TBC대구방송, TBC문화재단,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지방보훈청
 3. 응모마감 : 2001년 5월 31일까지
 4. 주 제 : “2·28기념탑” “2·28과 나의 학교생활”
“2·28과 나의 사회생활” 중 택일
2·28대구학생 민주운동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으로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부정·부패를 몰아냈던 대구 학생들의 의로운 사건 내용이 나의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담긴 글 (각 학교에 비치된 2·28민주운동사, 비디오,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5. 응모자격 : 대구광역시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고교 전학년
 6. 응모내용 : 초등 : 산문 1,000자 내외
중·고등 : 논술문 1,500자 내외
 7.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우편접수 요망)
 8. 접 수 처 : 사단법인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164-1(대구은행 신암동지점 2층) 우. 701-814
TEL : (053) 943-0228, FAX : (053) 959-2860
인터넷 : <http://www.228.or.kr>, E-mail : 228demo@hanmail.net
 9. 유의사항 : 학교명, 학교주소, 반, 성명, 자택주소, 전화번호를 명기 바람.
 10. 심사 및 발표 : 각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심사한 후 결과를 개인과 학교로 통보하고 인터넷에 공개
 11. 시 상 식 : 추후결정 통보
 12. 시상내용 : 대구광역시장, 교육감, 보훈청장, TBC대구방송사장, 2·28공동의장상 등 (초·중·고 재학생 및 지도교사, 시상내용은 접수량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
- ※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고, 사단법인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행하는 「2·28의 햇불」에 게재한 후 자료문집으로 활용합니다.